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3·1 독립운동과 세계평화유산

- 
-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 장소 :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 (본관 606호)
 - 주최 : 한국평화종교학회
 - 주관 :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
 - 후원 :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일정표



Program Schedule

- 🔍 **주 제** : 3·1 독립운동과 세계평화유산
- 🔍 **일 시** : 2019년 3월 8일(금) 13:30~18:30
- 🔍 **장 소** :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본관 606호)

일시	행사내용
13:3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및 등록
14:0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및 기조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 주재완(선문대) • 개회선언 • 학회장 인사 : 이재영(한국평화종교학회 회장) • 기조강연 : 황보윤식(함석헌평화연구소 소장) ‘그리스도교민족주의’, 그리고 3·1민중기억의 함석헌
15:20~16:30	<p>분과 1 _ 종교분과</p> <p style="text-align: right;">■ 좌장 : 조성윤(제주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정혜정(원광대) 3·1운동에서의 공화와 평화 - 신국가수립운동과의 연맥을 중심으로 도현섭(선학유피대학원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에 대한 연구 • 토론 : 이재일(선문대), 나권수(대진대)
16:50~18:00	<p>분과 2 _ 정치분과</p> <p style="text-align: right;">■ 좌장 : 유호근(청주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서유석(북한연구소) 김정은체제 ‘경제’ ‘사회주의’ 강조의 의미와 과제 이기완(창원대) 한일관계의 갈등과 동아시아 평화 • 토론 : 이윤식(여의도연구원), 황수환(강원대)
18: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및 폐회 <p style="text-align: right;">■ 좌장 : 김항제(천일국학술원 원장)</p>
18:30~19:30	만찬

목 차



■ 개회식 및 기조강연

• 기조강연

_ **황보윤식**(함석헌평화연구소 소장), ‘그리스도교민족주의’, 그리고 3·1민중기억의 함석헌 …… 3

■ 분과 1 _ 종교분과

• 발표

_ **정혜정**(원광대), 3·1운동에서의 공화와 평화 - 신국가수립운동과의 연맥을 중심으로 …… 35

_ **도현섭**(선학유피대학원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에 대한 연구 …… 53

• 토론 …… 73

_ **이재일**(선문대), **나권수**(대진대)

■ 분과 2 _ 정치분과

• 발표

_ **서유석**(북한연구소), 김정은체제 ‘경제’ ‘사회주의’ 강조의 의미와 과제 …… 81

_ **이기완**(창원대), 한일관계의 갈등과 동아시아 평화 …… 97

• 토론 …… 109

_ **이윤식**(여의도연구원), **황수환**(강원대)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3·1 독립운동과 세계평화유산

기조강연

▣ 황보윤식 | 함석헌평화연구소 소장

‘그리스도교민족주의’, 그리고 3·1민중기억과 함석헌

‘그리스도교민족주의’, 그리고 3·1민중기의와 함석헌

황보윤식 (함석헌평화연구소 소장)

목 차

들어가는 말

1. ‘그리스도교민족주의’와 3·1민중기의
2. 함석헌과 3·1민중기, 그리고 평화론

마무리 말

들어가는 말

함석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월만 되면 3·1운동 소리를 으레 해야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그것이 싫어졌습니다. 30년 50년(올해는 100년)이 지나가도 3·1절 소리만 크게 하는 것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3·1운동은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자라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3·1운동은 역사의 연륜 속에 가만히 싸두고 우리는 3·1운동 정신이 가져다준 ‘창조의 진액’으로 푸르름의 새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9-60).¹⁾

또 함석헌의 3·1운동을 역사의 큰 뜻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여론도 없는 역사에서, 공론도 없는 사회에서, 말도 못하는 민중에게, 밟으면 벌레/풀같이, 밟으면 밟히는 백성에게 감격의 눈물을 준 사건입니다(16-132).

함석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운동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글들을 보면, 답답해 견딜 수가

1) 함석헌이 쓴 글과 말한 내용은 모두 《함석헌저작집》(한길사, 2009)에서 따왔다. 하여 準據를 저작집 권수를 앞에 쓰고 쪽수를 뒤에 썼다. 가령, 저작집 1권 몇 쪽이라고 할 때 (1-20)식으로 표기했다.

없다. 민족정신이요, 민주정신이요, 반항정신이요, 밖에서 왔느니 안에서 나왔느니 하지만 왜 간단명료하게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할까. 한 마디로, 기독교 신앙이 없이는 3·1운동이 없다. 이것은 설명도, 해석도 아니요, 사실의 지적입니다”(16-288).

함석헌은 또 말합니다. 3·1운동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옛 생각을 버리고 민중을 무조건 믿고 대접한 것이요. 한국민족이 자기를 압박하는 일본을 사람으로 대접한 사건입니다(2-171).

함석헌이 말하지 않았다 해도 동아반도(東亞半島)²⁾역사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민인들의 3·1민중기의 근대화 한 획을 긋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민족적/사회적 모순을 일거에 날려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분야 연구논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연구실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3·1민중기의 용어문제와 성격문제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3·1민중기의 용어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3·1운동’, ‘3·1독립운동’, ‘3·1민족해방운동’, ‘3·1인민봉기’, ‘3·1혁명’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3·1민중기의’ 성격 규명이 확실해지면 통일된 용어가 확립되리라 봅니다.³⁾ 그리고 3·1민중기의 성격문제에 있어서도, 1) 자발적인 독립운동이었는데가 아니었는데가. 2) 비폭력운동이었는데가, 폭력투쟁이었는데가, 3·1민중기의가 폭력투쟁이었다면, 정의편에 선 폭력은 나쁜 것인가. 3) 3·1민중기의는 성공한 운동인가. 실패한 운동인가. 4) 외부동인에서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인가, 아니면 사회주의혁명의 영향인가. 5) 그리스도교⁴⁾는 3·1민중기의의 중심에 있었는데가. 아닌가의 문제 6) 3·1민중기를을 우파적 부르주아 민족주의 항일독립운동으로 볼 것인지, 좌파적 항일민족해방혁명/운동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등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3·1민중기의’ 용어에서 ‘동아반도공동체’의 남북 사학계가 공통으로 ‘3·1운동’ 또는 ‘3·1독립운동’으로 쓰고 있으나 여기서는 글쓴이의 주관과 의도에 의해 ‘3·1민중기의(民衆起義)’로 쓰기로 합니다.

2) 동아반도라는 말은 조선개화기 개화지식인들이 썼던 말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고 다시 남북이 분단된 이후 우리 땅을 복은 조선반도로 남은 한반도로 표기하고 있다. 통일의 시대를 맞아 우리 영토에 관한 용어를 통일해 본다는 의미에서 ‘동아반도’라고 표기했다.

3) 이만열, 《항일독립운동과 3·1운동》(함석헌평화포럼, 2011)에서 ‘항일독립운동’과 ‘항일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4) 그리스도교는 가톨릭(구교)과 프로테스탄트(신교)를 모두 지칭한다. 그러나 개신교 계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톨릭과 구분하기 위하여 基督教으로 쓰면서 신교를 그리스도교의 의미로만 쓰고 있다. 그 말은 가톨릭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내면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어 발음이기 때문에 신·구교 모두를 지칭한다. 이 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편의상 프로테스탄트의 의미로 썼다. 다만 가톨릭을 의미할 때는 천주교로 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민족(民族)과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개념들은 3·1민중기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민족/민족주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민족이란 개념은 단순하고 추상적도 아니며 가변적인 공동체적 개념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공통된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언어와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역사 및 영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념으로 하는 사상인 민족주의는 분명 유럽에서 발생합니다. 유럽의 민족주의는 16세기 중세봉건체제의 ‘봉건적 권력’과 ‘권위적 종교’에 대한 저항(르네상스, 종교개혁)에서 ‘개별적/반봉건적 민족주의’가 대두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만들어낸 나라는 16세기 이후 교황의 지배권에서 벗어나는 각 지역의 영국/프랑스 등 중앙집권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17세기에 나타나는 절대왕조들입니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시민(부르주아계급)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부르주와 시민계급은 절대왕정에 저항하여 ‘자유로운 시민사회’(부르주아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곧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의 독립혁명(1774. 7.4), 프랑스의 시민혁명(1789. 7.14)을 통해 달성한 민족 단위의 국민국가들입니다. 이들 시민혁명을 통하여 국가와 영토를 시민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중 특히 프랑스 혁명에서는 군주의 절대권과 성직자/귀족의 특권을 폐지하고 ‘자유/평등/박애’의 인권선언을 공포합니다(1789). 여기서 시민에 의하여 나타난 절대권력에 대한 부정은 곧 프랑스국가의 공화제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프랑스 민족주의로 발전합니다. 프랑스 민족주의에서 비롯되는 유럽의 민족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합체를 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밀착은 19세기 ‘반동민족주의’(反動民族主義)를 발생시킵니다. 반동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 제국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대량생산체제에 따른 원료공급과 노동력 및 판매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진출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국주의들은 그들 국가구성원(자본적 시민)들을 다른 지역에 진출하는데 동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제국주의 군대 창설). 곧 반동민족주의의 다른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발달하기 시작하는 어용적 언론매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동민족주의로 탄생하는 제국주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반식민지국가들을 등장시킵니다. 이에 식민지에서도 민족주의가 발생하여 반동민족주의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식민지민족주의’(植民地民族主義)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유럽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개념에 1) 혈연/지연이 같은 자연적인 요인, 2) 언어/역사 문화가 같은 정신적인 요인, 3) 산업혁명 이후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추가하면서 제국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어찌했든,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란 개념은 서구적인, 서구 중심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민족주의와 아시아의 민족주의는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서구의 민족주의 개념으로 우리 민족주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일본(이하, 일제라 함)의 조선강점으로 식민지조선(1897.10.12일 이후, 朝鮮은 大韓帝國으로 국명이 바뀌고 1910.8.29일 이후는 ‘식민지조선’이 됨)이라는 역사의 오류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우리의 민족주의는 유럽과 달리 내부적/자생적 그리고 밑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발생합니다. 더구나 식민지조선 시기 발생하는 ‘식민지민족주의’는 천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등 종교계 지도자와 성리학적(주리론+주기론적) 개화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발산되지만, 특히 그리스도교(개신교) 계열에서 역동적으로 파급되었다는데 그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배경에는 당시 식민지조선의 그리스도교는 개항과 함께 조선 땅에 들어오는 일본 제국주의에 정신적 침략(신사참배 등)을 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교 윤리를 바탕으로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조선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신앙적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민족주의’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교민족주의’⁵⁾입니다. 조선의 ‘식민지민족주의’/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3·1민중기의에서 용암처럼 분출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글에서는 타 종교가 3·1민중기에 기여한 사실은 논외로 하고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3·1민중기의와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어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와 3·1민중기의, 그리고 그의 평화론(平和論)론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 ‘그리스도교민족주의’와 3·1민중기의

역사일반으로 일제강점기 항일민족해방운동/항일독립운동이 발생하게 된 내적 동인으로 일제의 침략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인의 내재된 주체적 독립투쟁역량을 들고 있습니다. 곧 개항 이후 조선사회는 사회개혁의 추진과 외세침략의 방어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출발합니다. 20세기 초,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는 주된 외세는 일제였습니다. 일제가 침략의 양상을 달리하면서 조선침탈을 시도할 때마다 조선민족도 저항의 형태를 달리하면서 줄기차게

5) ‘그리스도교민족주의’ 용어를 개신교 계열의 학자들은 ‘기독교민족주의’로 부른다.

항전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외세침략에 대한 국권수호라는 주체적인 자주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의 흉모(凶謀)에 의해 민비가 살해되었을 때(1895.10.8) 의병항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러일전쟁 중에 한국영토의 1/4에 해당하는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했을 때(1904)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영토침략 야욕을 간파하고 《保安會》(보안회)를 조직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야욕을 박살 낸 적이 있습니다. 또 일제의 강제에 의한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1905.11.17.), 유학자와 민중에 의한 의병항쟁(민중식, 최익현, 유인석, 신돌석 등이 이끄는), 이외에 지식인에 의한 저항 또한 크게 일어납니다. 즉 《皇城新聞》(황성신문, 1898~1910), 《帝國新聞》(제국신문, 1898~1910),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 1905~1910) 등 민족신문의 연속 창간 등 언론보도를 통한 저항입니다. 이들 언론은 을사조약의 무효화를 연일 보도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약폐기 운동을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병활동, 언론투쟁 이외에 을사조약에 분노한 나머지 자결하는 열사들(민영환, 조병세, 송병찬 등)의 울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제침략에 직면하여 우리 민족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876년 개항 이후 외세의 침략에 맞서 의병구국항쟁과 국권회복운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근대적 정치의식을 성장시켜나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제국시대(1897년 이후) 양반계급으로 고위관료(대신, 오늘날 장관급)를 지내고 있던 자들로부터 더러운 민족배반적 행위가 나타납니다. 곧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는 일입니다. 이것이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 8. 29)입니다. 이후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조선이라는 참담한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조선은 비열한 매국노 양반(국왕으로부터가 아닌)으로부터 국권을 넘겨받은 일제로부터 야만적 식민무단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식민지조선인들은 ‘식민지 전략’의 비참함과 ‘자주적 독립’의 소중함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식민지조선 민족은 ‘절대독립’/ ‘노예상태에서 민인해방’⁶⁾의 사상적 근거로 근대민족주의를 배태하게 됩니다. 곧 머리말에서 이야기한 반(反)제국주의적 식민지민족주의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식민지민족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민족은 ‘기회포착론’의 전략⁷⁾에 의거 대봉기(大蜂起)의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식민지조선에서 역사모순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합니다(1917.11.07., 이를 ‘사회주의10월혁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레닌(Lenin, 1870~ 1924)은 여러 피압박민족의 독립을 돕기 위해 민족자결정책에 의한 무병합/무배

6) 함석헌은 그가 경험한 일제의 조선민족 탄압양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7-25).

7) 慎鏞夏, 《日帝强占期 韓國民族史》 상(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61쪽.

상에 의한 강화원칙(11월 대외평화선언, 1917)을 국제사회에 제시합니다. 이에 자극이 되어 미국도 불가피하게 윌슨(Wilson, 1856~1924)이 민족자결을 포함한 14개조 강화원칙(1918. 1)⁸⁾을 발표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 연합국의 승리도 있게 됩니다(1918. 11.11). 연합국의 승리는 피압박민족에게 강권주의(強權主義: 專制權力)에 대한 공리주의(公理主義; 민주주의, 자유, 평화)의 승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11월 대외평화선언, 미국의 14개조 평화원칙, 공리주의의 승리는 전후 세계에 ‘민족자결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사조를 만들어냅니다. 민족자결주의의 대두는 식민지조선의 항일민족해방운동세력/항일독립운동세력들에게 독립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 3·1민중기의라는 해석입니다.⁸⁾ 이것이 역사학계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3·1민중기의의 외적 동인에 대하여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3·1민중기의를 ‘항일독립운동’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3·1민중기의의 외적 동인(기폭제)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하여 ‘항일민족해방운동’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레닌의 평화선언과 윌슨의 평화원칙, 그리고 공리주의가 융합되면서 당시 세계의 시대사조로 등장하고 있던 민족자결주의를 외적 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연구자들은 3·1민중기의를 ‘조선민족해방운동’이라 이름을 붙이고 러시아의 10월혁명을 외적 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⁹⁾

함석헌은 3·1민중기의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에 나라가 먹히고 총독정치 밑에 압박과 업신여김을 받은 지 13년¹⁰⁾ 되던 때입니다. 세계대전 후 부는 새 바람을 맞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고 3·1운동을 일으켜 세계인류의 정의감을 호소하여 잃었던 주권을 찾아보려 했습니다”(6-256). 함석헌도 어느 때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외적 동인이 되었다고 보지만, 대체로 세계대전 이후 발생하는 세계사조(민족자결주의)를 3·1민중기의 외적 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1민중기의의 일반적 動因은 그 동안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여 축적된 우리 민족의 투쟁역량을 內的動因으로 하고 여기에 국제사회의 변혁분위기가 外的動因이 되었다고 봅니다.

8) 일부 연구자는 민족자결주의를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에 들어있는 민족자결주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편협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족자결주의는 레닌이 먼저 발표합니다.

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오월, 1988, 139~140쪽)

10) 13년은 19년의 誤記로 봅니다.

이제 이 글의 본론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3·1민중기와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지요. 대체로 3·1민중기와의 3단계로 전개됩니다. 제1단계는 ‘부르주아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칭 33인의 조선민족대표들이 3·1민중기의를 주도하여 기획합니다. 그러나 실제 주도세력은 기층 인민대중인 학생/노동자/농민이 됩니다. 그 바람에 3·1민중기와는 일제의 탄압권력에 대한 감상적 전략에서 혁명적 전략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단계 민중기위부터는 독립청원적/외세의존적 독립전략과 무저항/비폭력의 소극적 투쟁전술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무력저항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3단계에서는 조선민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혁명적 폭력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총칼로 무장한 일제 헌병경찰에 맨손으로 저항(이를 도수혁명徒手革命이라고 부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식민지조선 민족의 생존권 사수는 ‘총대총/칼대칼’의 무력으로 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부르주아 민족지도자’(종교계 지도자 중심의)들은 처음부터 비폭력 평화시위를 강조하였지만,¹¹⁾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조선의 민중들은 끝내 폭력적 투쟁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폭력적 투쟁을 선도하거나 실천적으로 활동한 군중에는 그리스도교 신도가 많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에 투옥된 수감자의 종교분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¹²⁾ 수감자의 종교분포를 보면, 3·1민중기의를 기획한 부르주아 민족지도자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3·1민중기와의 관련하여 수감된 사람(일제에 의하여 不穩朝鮮人이라고 일컬어지는)들의 종교통계를 보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그리스도교인으로서 3·1민중기와의 이후의 독립운동을 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식민지민족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그리스도교민족주의’라는 사상적 특징이 나옵니다.

3·1민중기위에 직접 참여하였던 함석헌은 일찍이 <3·1운동과 기독교신앙>(1979, 16-285)라는 글에서 “3·1운동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일어난 것이고 어디서 한 일이 아니라, 대지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한일이었으며 무슨 잔소리를 한 게 아니라 만세하고 한 소리 외친 것이었다. 이 한 소리가 찌그러졌던 역사의 바퀴를 바로 잡아 다시 제 길을 찾아 돌아가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16-286)라 하여 3·1민중기와는 전 민족이 함께 한 만세시위였음을

11) 함석헌은 3·1운동은 종교적 배경이 있었고 비폭력이었다(5-92)고 증언하고 있다.

12) 姜德相 <朝鮮に於ける獨立運動に關する件>, 《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ニ關スル狀況》(《現代史資料- 三- 一運動편-》, 國學資料院, 2004, 110쪽)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3·1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만세’ 한 소리로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는 무한한 힘이 있다.... 만세는 사람의 소리(人聲)가 아니라 땅의 소리(地籟)요 하늘이 소리(天籟)다. 그보다도 예수가 말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한 불의 소리(火籟)다(16-287)라 하여 3·1민중기의를 참여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가 말한 ‘불의 소리’를 일제에 알리려 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3·1운동의 정신적 원천은 기독교 신앙”(16-288)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말년에 정치가 극도로 타락해 있을 때, 그리고 불교/유교도 타락하여 씨을을 건질 힘이 없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 비참 속에 헤매는 씨을 속에 새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의 형편과 과학에 대한 새 지식을 가지고 왔다(16-289)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동아반도에 들어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와 3·1민중기위의 원천이 그리스도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기독교 신앙 없이는 3·1운동이 없다”(16-288)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3·1민중기위는 ‘식민지민족주의’/‘그리스도교민족주의’의 ‘분노와 발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3·1민중기위에 참여했다면, 그리스도교민족주의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석헌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운동 때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7-294).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교민족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윤경로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개항 이후 이 나라의 새로운 이념과 시대정신으로서 그 위상을 지켜오며 농축해온 자주독립의식을 3·1운동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였다.”¹³⁾라고 전제합니다. 윤경로는 그리스도교인들의 개화론과 근대주의를 배경으로 한 사상적 바탕이 3·1민중기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을 제외한 “독립만세시위는 평양/의주를 시발로 선천/정주/안주/진남포/원산/해주/사리원/연백 등 비교적 기독교 세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도시들은 경의선과 경원선이 지나가는 인접도시라는 특성도 있지만, 평소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반일기운이 강했던 지역이다.”¹⁴⁾라고 고찰해냄으로써 인간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짓밟은 일제침략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민족의식과 결합하면서 3·1민중기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13) 서울노회사편찬위원회(책임집필 윤경로), 《서울老會의 歷史》(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53쪽.

14) 尹慶老, 《105인人事件과 新民會研究》(一志社, 1990) 71~96쪽.

있습니다. 윤경로는 다른 연구서에서도 “3·1운동을 전 민족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점화 확산시켜 나간 데에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공헌이 크다고 봅니다. 당시 기독교 교세는 전 인구 1,700만 명 중 2%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¹⁵⁾ 이러한 열악한 교세를 감안할 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측 인사가 16인이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운동이 지방으로 확산 되면서 이 운동의 진원지와 주도자 대부분이 교회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또 피검자를 종교별 통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인이 가장 많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3·1운동에서 그리스도교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¹⁶⁾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윤경로는 고춘섭이 지은 『倣信史』(경신사, 경신중고등학교, 1991)를 인용하여 당일 4,000여 명이 운집한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와 만세시위를 주도한 것은 경신학교(倣信學校) 출신 정재용 전도사였다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3·1민중기의를 주도한 그리스도교인 16명을 포함한 민족대표들이 일제 경찰에 자수하여 체포 되어감으로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그리스도교계열의 학생과 지식인층 들은 3·1민중기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어서 윤경로는 지역별 3·1민중기위의 상황과 독립만세 시위 주동회수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1민중기위의 초등단계부터 그리스도교인과 교회가 이 기의(起義)를 점화하고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¹⁷⁾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 김형석은 3·1민중기위에 참여한 인적사항을 ‘지방별/종교별 참여도’를 분석해 냅니다. 여기서 당시 천도교인 수의 1/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교인이 천도교보다 더 많이 3·1민중기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형석 역시, 그리스도교인의 3·1민중기위에의 참여를 당시 그리스도교의 민족적 성향으로 해석하는 한편 그리스도교가 3·1민중기의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¹⁸⁾ 그 외

15) 박철호 목사(인천사연구소 전임연구원)는 인천의 생명평화포럼이 주관한 발표(〈인천의 3·1독립만세운동과 감리교회〉, 2019. 2.14)에서 기독교가 전체인구의 1.3%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윤경로교수의 검토가 맞다고 본다.

16) 1919년 말 일제의 경찰 측이 작성한 종교별 피검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천도교 2297명(11.8%), 불교 220명(1.1%) 유교 346명(3.6%), 기독교 3,426명(17.6%)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 교파별로 보면 감리교인이 560명, 조합 교회 7명, 천주교 55명, 기타 기독교인 320, 장로교 2,486명이었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1990, 38~39쪽) 3·1민중기위의 준비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起義段階에서는 천주교인도 적지 않게 참여하였다(尹善子, 〈3·1운동기 조선천주교회의 동향〉, 《全南史學》11, 1997 참조). 또한 3·1민중기위에 그리스도교 교인이 참여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민중기위에 대한 자료는 金容福, 〈3·1運動과 韓國 그리스도교의 告白(信仰)〉, 《神學思想》 51집(1985년 겨울) 669~679 참조바람.

17) 서울노회사면찬위원회(책임집필: 윤경로), 앞의 책(2001) 154쪽.

18) 김형석, 〈한국기독교와 3·1운동〉,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종로서적, 1992) 359쪽.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자는 아니지만 신용하¹⁹⁾와 김진봉²⁰⁾도 3·1민중기의를 그리스도교가 주도(主導)해 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아닌 이들이 3·1민중기의를 그리스도교가 주도해 갔음을 밝혀낸 것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3·1민중기의를 그리스도교인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 연구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교민족주의/기독교민족주의라는 용어가 3·1민중기 의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3·1민중기 의의 내적 동인으로 개항 이후 그리스도교 중심의 애국계몽운동(실력양성론과 자강독립론) 결과로 민족 내부에 축적된 민족역량을 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항기에 ‘일반교육’을 목적으로 한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입니다. 이런 근대교육기관은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입국을 계기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1884). 곧, 배제학당(1885), 이화여학교(1886), 경신학교(1886), 정신여학교(1887), 숭실학교(1897) 등의 설립입니다. 이들 미션계 학교의 설립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조선인 학생들은 그리스도교 사상과 함께 서양의 근대적 학문 및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미션계 학교의 교육활동은 자연히 근대적 지식의 대중화와 함께 일제침략에 대한 민족의식도 고취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근대학교에서 교육받고 영향을 받은 지식인/학생을 중심으로 국권회복운동/계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계열의 근대학교를 통하여 싹 틔우게 된 근대의식은 자연스럽게 전통적 사상인 성리학 적 이기론(理氣論)과 결합하면서 사상의 동태화(動態化)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상의 동태화는 본능적 저항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조선사회를 이끌어왔던 지배이념인 성리학의 주리사상(主理思想)은 일찍이 전통유생/양반관료(유인석/최익현/이만손/홍재학 등)들에 의해 개화사상을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일제의 침략이 갈수록 노골화되자 민족생존권 사수/국권회복을 위한 의병구국항쟁(義兵救國抗爭)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근대사상으로 무장된 지식인(현실적 개화세력=개화자강파) 들은 주기론(主氣論: 人物性同論)과 합류하여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을 수용하게 됩니다.

19) 한국 기독교는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의 큰 지주의 하나였으며 3·1독립운동에서 빛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慎鎭夏, 〈문화운동〉, 尹炳奭 외 共著, 《韓民族의 獨立運動史》,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0, 313쪽)

20) 전국 독립만세운동 중 기독교 단독 주동이 78회(황해 19, 함남 12, 경북 11, 함북 7, 평남 5) 기독교와 천도교의 공동주동이 42회(가원 15, 평남5, 경남·황해·평북이 각 4회)였다(金鎭鳳, 《三一運動史研究》, 國學資料院, 2000, 29~30쪽).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게 된 이들 개화자강파들은 실력양성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속하는 단체와 인물을 보면, 곧 대한자강회의 윤치호(尹致昊), 대한협회의 남궁 억(南宮億), 신민회의 안창호(安昌浩), 독립협회의 서재필(徐載弼)/이상재(李商在), 오산학교의 이승훈(李昇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강한 민족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먼저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사회진화론적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전개하게 됩니다.

3·1민중기에서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처음 주장한 연구자는 1971년 당시 숭실대학교의 金良善(목사/교수)입니다. 김양선은 “한국의 민족운동 내지 독립운동은 기독교회와 더불어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기독교 교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사상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기독교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타민족의 부당한 속박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통하여 민족정신이 크게 진작되었고 다시 독립운동으로 비약되었다.”²¹⁾라고 하여 그리스도교의 인간존엄성과 자유평등사상이 그리스도교인을 외세침략에 항거하게 만들었다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있어 3·1운동을 계획한 중추세력 7명 모두는 기독교인이었다.”²²⁾ 3·1운동이 종파와 계급을 초월한 거족적 민족운동으로 가능했던 것도 기독교라는 주도체가 있었기 때문이다.”²³⁾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윤리와 민족주의 사상을 융합시킴으로써 ‘그리스도교민족주의’의 시원을 만드는 처음 연구자가 됩니다. 곧 김양선은, 처음으로 개항과 함께 조선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교 정신이 일제침탈과 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민족독립의 사명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이 3·1민중기의를 계획하고 항일독립운동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은 김양선의 주장을 바탕으로 연구의 심도를 더 해나갔습니다. ‘기독교민족주의’/‘그리스도교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쓰기 시작한 학자는 1990년 이만열입니다.²⁴⁾ 이만열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민족주의’/‘그리스도교민족주의’ 개념은

21) 金良善, 〈3·1運動과 基督教- 啓蒙과 抵抗의 十字架〉, 《韓國現代史》 8 新社會 100年(新丘文化史, 1971) 158쪽.
 22) 3·1민중기의를 계획한 주동세력(민족대표) 중에 그리스도교 계열의 사람을 김양선이 7명으로 본 데에 대하여 윤경로는 16명으로 조사하고 있다.
 23) 국내에서 3·1운동을 획책한 곳은 서울·평양·정주 등 세 곳이었는데 서울에서는 孫秉熙·崔麟 등 천도교측 지도자와 咸台永·朴熙道·李甲成 등 기독교측 지도자들이 중추세력이 되었고, 평양에서는 金善斗·邊麟瑞·都寅權·李德煥 등 기독교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되었고, 정주에서는 李昇薰·金秉祚·이명룡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金良善, 앞의 글, 1971, 159쪽).

민경배의 ‘기독교 민족교회’(1978)²⁵⁾, 윤경로의 ‘기독교민족운동’(1989), 노치준의 ‘기독교민족주의운동’(1994) 그리고 종교학에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그리스도와 민족문제’(양현혜, 1991) 등의 연구주제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고착화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장규식이 2001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에서 ‘한국기독교민족주의’라는 독립된 용어를 연구주제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이 나라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됩니다.²⁶⁾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민족주의’/‘기독교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가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²⁷⁾ 그러면 ‘그리스도교민족주의’가 하나의 역사 용어/개념으로 굳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만열은 3·1민중기의 배경에 대하여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기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일제의 주권탈취와 한국강점에 따른 민족적 모순의 증대에 있다.”고 전제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폭압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에 저항하는 식민지 민중의 반일의식과 항일에너지는 증폭되고 누적되어 분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적 모순 증대에 따른 항일에너지의 표출이 3·1운동이다.”²⁸⁾라고 지적함으로써 3·1민중기의 내적 동인이 민족내부에서 형성된 반일의식과 항일에너지였다는 역사일반론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어 민족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상 및 실천을 이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만열은 그리스도교민족주의 발생배경으로 식민지조선 민중의 항일의식과 항일에너지로 급격하게 성장한 잠재적 정치의식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교에 의하여 신교육을 받으면서 자주독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던 학생과 지식층 등 인적 자원의 증대도 한몫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이만열은 3·1민중기의 배경과 관련하여 “종교탄압은 오히려 종교세력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은 종교의 확산에 좋은 토양이”²⁹⁾ 되었다는

24) 이만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基督教思想》(대한기독교서회, 1990) 353쪽.

25) 閔庚培, 《韓國基督教과 그 民族教會 成立》, 《論文集》제8집-제편 人文·社會科學(崇田大學校, 1978) 393~410쪽. 이만열은 딱히 ‘기독교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기독교민족주의’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81 및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참조) 이외에 노치준도 〈한말의 근대화화 기독교〉라는 글에서 ‘기독교민족주의운동’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역사비평》, 1994 겨울호, 305~307쪽.)

26)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혜안, 2001) 참조.

27) 이만열은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이라는 글에서 민족적 과제 수행에 대한 기독교인의 활동을 ‘기독교민족운동’이라고 하였다.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17쪽.)

28) 이만열, 앞의 글(1991) 335쪽.

29) 이만열, 앞의 글(1991) 357쪽.

주장입니다. 일제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교탄압은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자의 수를 증가시켰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한편, 이만열은 그리스도교인들 가슴 속에 서서히 담겨져 간 신앙인으로서 윤리의식과 민족의식은 교회에서 발행한 팜플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를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곧 팜플렛에서 “조선의 형제여,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격퇴해야 합니다.”라고 쓰면, 이러한 문구를 당시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악마’를 ‘일제’로 간주하고, 교회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천국과 박애와 자유”에 관해 설교하면 이를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천국’은 ‘나라의 독립’으로, ‘자유’는 ‘해방의 날’로 해석하여 받아³⁰⁾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정신과 민족의식의 결합은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3·1민중기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계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또 일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改正私立學校規則>(개정사립학교규칙, 1915)을 공포하여 그리스도교계 학교에서 예배와 종교교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가르치는 언어도 일본어로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결과 많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1910년 829개교에서 1915년 5월말 298개교 줄어듦). 이에 대하여 이만열은 이러한 일제의 종교와 교육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역작용으로 그리스도교와 그 계열의 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부여함으로써³¹⁾ 반일적(反日的) 신자의 증가와 반일에 너지를 축적시켰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와 민족주의’를 포지하게 된 일부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직업적 종교가로 변신하거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민족사상을 고취하고 독립의지를 굳혀나갑니다.³²⁾ 이들은 그리스도교적 체험으로 종교적 가치가 내면화된 신앙적 토대 위에 항일독립운동을 실천하게 됩니다.³³⁾ 일제의 강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같은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을 베풀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하고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민중기에 합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반으로 민족공동체가

30) 이만열, 앞의 글(1991) 358쪽.

31) 이만열, 앞의 글(1991) 358쪽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와 역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29쪽.

32) 류청하,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韓國近代民族運動史》 1980, 455~456쪽. 그리고 <三一運動前の朝鮮國內狀況>(1915~1919), 《現代史資料-三-一運動篇》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33) 이 글에서는 항일독립운동과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용어를 구분하였다. 그리스도교계열의 민족운동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계열의 민족운동은 항일민족해방운동으로 표현하였다.

저한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지성적/이념적/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그리스도교민족주의’라고 합니다.³⁴⁾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20세기 전반기 조선사회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 확산일로를 걷게 됩니다. 당시 조선 땅은 조선인으로서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보금자리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하느님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외세에 의하여 약탈당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됩니다. 같은 운명적 현실에 직면하게 된 그리스도교와 조선의 식민지민족주의는 서로 감흥(感興)이 됩니다. 당시 식민지조선의 그리스도교는 신앙적 토대에서 볼 때 고난에 처한 민족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항일독립운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항일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분위기를 모색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그리스도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당시 위기에 빠진 조국의 현실 타개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과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선진문명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 교회는 정치/경제적 피난처로 생각하는 ‘비신앙적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 비신앙적 지식인들은 치외법권적 영역이면서 상대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던 그리스도교 교회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목적의식적 교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곧 목적 달성을 위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당시 그리스도교 교회는 1) 신앙적 교인과 2) 목적의식적 교인 두 계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 ‘목적의식적 교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聖經)를 통하여 정의/자유/독립과 평화의 이념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의 그리스도교 교인(신앙적 교인과 목적의식적 교인 모두 포함하여)들은 신앙의 터전 위에 조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항일민족주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구조 속에는 종교적 신앙의 측면과 민족적 양심의 측면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그리스도교 교인이 조선의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참여하는 신앙적 양심(良心)의 측면과 민족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애족적 책무(責務)의 두 측면을 모두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제가 폭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교 교인의 종교적 신앙의 측면과 민족적 양심의 측면이 상보적으로 상승 작용하게 됩니다.

34) 장규식은 앞의 책(2001) 29쪽에 “기독교민족주의를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티즘과 결합한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적 양심은 민족적 책무를 강화시켰고, 민족적 책무는 종교적 신앙심을 더욱 심화시켜 주었습니다(이만열, 1990년). 이렇게 일제 강점하의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심화된 불가분(不可分)의 신앙심과 민족의식은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일제에 의해 강제된 식민지라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3·1민중기의의 기폭제와 확산의 기본적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2. 함석헌과 3·1민중기, 그리고 평화론

이제부터는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와 관련하여 그가 3·1민중기의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과 3·1민중기의 이후 함석헌이 갖는 평화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함석헌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3·1민중기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3·1민중기의에 즈음하여 가지게 된 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서 자랐으며 한국이 장차 받는 것도 신앙에 의해서 될 것으로 믿어왔는데, 주위의 모든 학생들이 좌익사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교신앙이나 민족사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끌어넣으려는 움직임에 시종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13-224). 그의 이런 증언에 의하면 함석헌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내 민족주의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서는

“그때 내가 받은 교육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신학문이라 했습니다. 이 신학문을 가르쳐준 신문명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는 스팅크스였습니다. 기독교와 민족주의입니다.”(7-23)라고 함으로써 함석헌이 식민지조선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도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촌에서 나와 평양으로 올라가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 3학년까지 올라갔는데,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과 종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짝 들어 있었어요....분위기가 기독교 신앙이요, 민족주의사상에서 자란 나로서는...” (13-234) (7-75)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곳밖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7-23). 이렇게 해서 함석헌은 그 자신이 3·1민중기의 당시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갖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석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갖게 된 배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하여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그의 가정환경이 그에게 끼친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석헌은 어려서는 함석헌 집안에 한학자이며 민족주의자였던 함일형(咸一亨)과 그의 둘째 아들, 곧 일제 침략기 3·1민중기의 때 평양의 송덕학교 교사로서 학생동원의 책임을 졌던 함석은(咸錫恩)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함석헌이 포지하는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3·1민중기에 참여하고 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니던 ‘平壤高等普通學校’(평양고등보통학교, 朝鮮總督府高等普通學校官制, 大正5年勅令 第130号에 의해, 1909년 설립된 관제 학교)를 몇 개월 남겨두고 중퇴합니다. 얼마(2년 여)를 쉬었다가 다시 평안북도 정주(定州)에 있는 오산학교(五山學校, 1907. 12. 개교)로 가게 됩니다. 오산학교는 남강(南岡) 이승훈(李承薰, 1864~1930)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일 때 함석헌은 이 학교 교사였던 이승훈/조만식(曹晩植)등으로부터 민족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간접적으로는 안창호(安昌浩)에게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승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함석헌은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산학교 재학 중일 때 함석헌은 ‘그리스도교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함석헌은 다시 일본 도쿄[東京]으로 건너가 동경고등사범학교(現 쓰꾸바대학) 문과에 입학하게 됩니다.(1924~28) 여기서 역사/윤리 등을 전공합니다. 함석헌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김교신(金敎臣, 1901~1945)을 통하여 일본인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찌무라 간조가 꾸리는 <성서연구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함석헌은 김교신, 송두용(宋斗用, 1904년~1986)/정상훈(鄭相勳)/유석동(柳錫東)/양인성(楊仁性) 등과 함께 <朝鮮聖書研究會>(조선성서연구회)를 결성하여(1925) 희랍어 원문으로 성서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후 이들은 동인지 《聖書朝鮮》(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1927. 7, 도쿄). 성서조선은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라는 동인지 표어처럼, 그리스도교를 민족주의와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석헌은 이 잡지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라는 글을 연재합니다(1923~33) 이 글은 뒤에 《뜻으로 본 한국역사》(1962, 이하 韓國歷史라 함)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완숙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듯 그의 가정은 그를 그리스도교 신자로 만들었고, 그가 살던 시대는 그를 민족주의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함석헌은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고난의 역사—한국역사의 밑에 숨어 흐르는 기조는 고난이다.”(《뜻으로 본 한국역사》, 1962년판, 84쪽, 이하 함석헌이라 함.)라 하여 우리 동아반도의 역사를 구약성서와 연결시켜 하느님이 준 ‘고난’(苦難)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韓民族)의 삶을 ‘고난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숙명론 내지 패배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석헌은 하느님이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준 데에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곧 “고난이야말로 한국이 쓰는 면류관”(함석헌 86쪽)이라고 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가시면류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인의 고난의 면류관 뒤에는 하느님이 예비하신 희망의 약속이 있다고 보았습니다(함석헌, 452쪽). 함석헌은 스스로 자신을 민족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일반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자주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며, 우리의 근현대사가 만들어낸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해방은 되었다고 하나 독립되지 못한 우리 역사 공간의 회복을 위한, 그리고 나아가 침탈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유지하는 기본으로써 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임을 자인합니다. 내게 있어 〈민족〉은 하나의 단순한 수사적 가치를 넘어서 그를 바탕으로 역사와 시대를 망라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있었던 과거의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족주의자이며, 민족주의(국가주의, 국수주의가 아닌)를 나의 기본으로 삼는 보수적 원천으로 생각합니다.”(《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문 ‘넋째 판에 부치는 말’)라고 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가졌고 그 고난의 역사는 하느님이 우리 민족에게 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합니다.³⁵⁾

이렇게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3·1민중기의가 발생할 즈음에 발생하고 해방조국이 될 때까지 견지하고 있다가 해방 이후 분단조국이 되자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통일 민족주의’로 발전적 진화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해 왔지만 초기적 ‘그리스도교민족주의’

35) 황보윤식, 〈함석헌의 사관-신의사관〉, 《한국기독교와 역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137쪽)

사상을 포지하게 된 함석헌은 나이 19살 때³⁶⁾, 3·1민중기기에 참여합니다(13-192). 그러면, 함석헌이 3·1민중기기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과 그의 3·1민중기기에 대한 평가를 함께 검토해보기로 합니다. 함석헌은 자신이 3·1민중기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3·1민중기의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집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1919년 이른 봄) 열촌 형 되는 함석은이라는 이가 숭덕고등과의 선생으로 신입이 되어 오게 뻔했습니다. 그는 합병 전부터 일본 유학을 하다가 바로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때였습니다. 그를 찾아간 일이 몇 번 있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는 나를 부르더니 3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운동을 일으킨다는 말을 하고 나더러 평고학생대표를 만나겠으니 주선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는 평안남북도 청년운동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하숙으로 돌아와 홍순문(경창리에서 함께 하숙을 하고 있던 친구)과 의논한 끝에 각 학년에서 그럴만한 몇을 우리 하숙에 모이게 했습니다. 석은 형이 우리 하숙으로 와서 대표들을 모아 놓고 모든 계획을 설명하고 부서를 짰습니다. 기미년 3월 1일 운동을 일으키기 전날 밤 숭실 대학 한 건물 지하실에서 윤원삼 선생으로부터 인쇄된 독립선언서 봉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때의 흥분과 긴장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7-82). 이하 3·1민중기기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3·1민중기의 이튿날부터 계엄상태가 됩니다. 3·1민중기에서 민족적 자극을 받은 함석헌은 다니던 평양고보를 졸업하지 못하고 2년 뒤 오산학교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서 좀 긴 글이지만 실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거기(3·1민중기기를 말함) 참여했나 하면 집안 숙(叔)되는 분이 (있었어) 하루는 (불러서) 갔더니, 날더러 “이러저러해서 이제 세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파리에서 강화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회에 민족자결주의로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해도 평안도의 내가 청년을 맡았는데 심부름을 좀 해달라”고 말해요....그니가 와서 대표되는 학생들을 놓고 설명을 해줬어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런 걸 하겠는데 우리 민족도 독립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걸 표시해야 세계 강화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동조를 해주지 표시가 없으면

36) 그는 어떤 때는 18살(고등보통학교 3학년) 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12-224).

되겠나?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해라” “그날 밤으로 승덕학교 지하실에 가서 인쇄가 된 선언서를 한 아름씩 안고 왔지. 관립고등학교 애들 태극기가 어드런지 그것도 잘 몰라요. 나는 그래도 집에서 알고 자랐으니까, 내 손으로 나무에다가 태극기를 새겨 밤새도록 찍어가지고 이튿날 정한 시간에 나갔어요..... 나는 평양관 앞에 경찰서 부근인데 거길 맡았어요. 경찰서니까 조금 싫은 생각도 났지만 하기로 뒀으니 안 갈 수가 없지. 그래 선언서를 안고 가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섰다가 열두 시 치는 종소리가 들리자 그걸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벌써 일본 관청에서 알았어. 한 시면 승덕학교에서 고종 추도식을 지내고 거기서 어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학생들이 그 시간에 선언서를 뿌리라고 돼 있어. 그래 나는 맡은 대로 뿌리고 했는데, 군인들이 총에다 칼을 꽂고 (길에 서고) 했어요. 위에서 명령이 내렸나 봐요.” “절대 폭력 쓰지 마라, 뭐라 하지 마라” 우리가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일부러 얼굴에 대고 흔들고 이래 줘도 죽은 사람처럼 딱 가만히 있어요. 저녁 때가 되었어 승덕학교 악대를 앞세우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했지. 낮에 가만히 있던 군대들이...(13-236~237) 평양에는 폭력이 없었다. 이튿날 눈이 내렸다.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다. 잡혀들어간 사람이 수만 명, 죽은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함석헌은 3·1민중기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간디가 일으킨 비폭력운동보다 전에 일어난, 자발적으로 한국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그야말로 저 시골구석에 이르기까지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어난 반항이었습니다(13-224/225). 라고 하여 함석헌은 3·1민중기의가 비폭력운동”(13-123, 12-223)이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석헌은 3·1민중기의에서 같은 해방이었지만 속은 민족개조의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14-270).

이와 같이 3·1민중기의는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더욱 굳게 만들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역사적 사명감을 갖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게도 시기를 짓는 변화가 없지 않았습니. 3·1운동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3·1운동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무런 역사적 사명감 없이 하나의 사적인생(私的人生)을 살다 갔을는지 모릅니다.... 꺼지지 않는 역사의식이 생겼습니다(7-75). 여기서 함석헌의 중요한 말은 ‘사적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곧 그는 3·1민중기에 참여하고 목도(目睹)를 함으로써 공적인생(公的人生)을 살게 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는 3·1민중기로 인해 민족에 대한 자각운동이 일어났다고 덧붙입니다(7-25).

한편, 함석헌은 3·1민중기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운동의

세례를 받은 것이 없었더라면 깊은 깨달음을 그만두고라도 인생과 역사에 대한 방향감각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6-261). 또 함석헌은 “3·1운동 참여를 계기로 평생 사회적 사명, 종교적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다. 공적인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3·1민중기위에 앞장을 섰다는 이유로 학교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7-67). 곧 3·1민중기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까닭에 민족적 회의감에서 평양고등보통학교를 그만 두고 오산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산 학교는 그에게 새로운 민족운동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13-224, 225). 함석헌은 3·1민중기위에서 겪은 해방이었지만 속은 민족개조의식이 있었다(14-270)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없었으면 나의 오늘은 없다.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제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관립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을 것”(3-164)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3·1민중기위에 참여하고 나서 그는 꺼지지 않는 역사의식/역사적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7-75쪽). 그러면 함석헌이 3·1민중기위에 참여하고 나서 생긴 그의 역사의식/역사적 사명감은 무엇일까? 그의 증언을 토대로 그의 역사적 사명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중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것은 3·1운동이 처음이다. 3·1운동 때는 인텔리층이 민중을 향해 겸손했다....3·1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한 시기를 짓는 사건이다. 그 전의 역사는 정치가의 역사, 영웅주의 역사였다. 이제부터는 싸움이 역사의 주체다. 자주하는 민의 역사다...이것은 민의 평화적인 반항으로 하려는 것이었다(6-173).

3·1운동은 민중이 우리도 살아야겠다. 살아야 하는 한 외침이었다. 3·1운동은 곧 민족의 정신이다. ...그렇게 큰 운동이 손에 무기 하나 없이 순전히 비폭력의 평화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세계여론에 호소하면 되리라는 그 신념이었다. 국제적인 협동/협화를 믿는 정신이다”(5-19).

“우리 역사에서 평화운동에 입장을 선 것은 31운동과 4.19다”(12-80).

그는 또 다른 글에서 3·1민중기위의 의미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함석헌의 평화주의사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증언만 추려봅니다. 첫째, “전체의식을 일으켰다. 사람은 개체가 아니고는 존재하지 못하지만, 생리적/심리적/도덕적으로도 살리는 힘은 전체에 있다. 자기 속에 전체를 체험했을 때 개체는 참으로 삶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팔아먹은 양반계급은 여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나라가 망한 아픔과 설움은 나라 팔린 씨울이 당하지 않으면 아니 됐다.... 일본의 정책은 무단적인 것이어서 우리 민족을 만주로 내몰고 따뜻하고 살진 반도에는 자기네 민족을 옮겨오려 했다. 북으로 가는 열차는 보따리 바가지 쪽으로 쫓겨가는 불쌍한 농민들로 가득 찼다. 그것을 보면서야 ‘우리’라는 의식이 일어나게 되었다(5-30~31). 둘째, 비폭력운동이었다. 비폭력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3·1운동의 위대한 운동을 죽이는 일이다. 그 당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 나라는 인도와 우리나라뿐이다. 비폭력의식의 발생은 내면화 과정이다. 정신이 물질을 극복하고 살려내는 일의 한 토막이다”(5-33). 사실, 함석헌은 3·1민중기억을 비폭력저항운동이었다고 보지만, 근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3·1민중기억은 비폭력 도수혁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함석헌은 “신약성경 계시록에 ‘어린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어린양은 평화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리스도는 절대 평화주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절대 평화주의만이 모든 국가와 폭력을 이길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5-35). 이와 같이 함석헌은 3·1민중기억을 평가하는 내용 중에 3·1민중기억을 씨울의 평화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석헌은 다시 “일제 36년간 민족정신을 버텨주고 3·1운동의 등뼈 노릇을 한 것은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교인들은 관념적으로/교리적으로 하늘나라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혁명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 안락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혁명의 뜻은 회의 원리를 닮는 데 있습니다(16-211~224)라고 함으로써 3·1민중기억을 평화주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함석헌의 평화론’³⁷⁾은 이 회의 원리에 대한 논리를 펴면서 시작됩니다. 함석헌은 화(和)의 뜻을 협화의 화요, 평화의 화라고 말합니다.³⁸⁾ 이어 그는 평화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함석헌은 그의 ‘평화주의’ 사상을 말하기에 앞서 국가에 대한 개념, 전쟁에 대한 개념인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함석헌은 인류가 전쟁을 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인류평화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함석헌은 전쟁에 다음과 같은 인식을 합니다. “월남사건도 그렇고 헝가리 사건도 그렇고 티베트 사건도 그렇다. 냉전이니 지역전인 하는, 전에 없던 괴물은 실은 세계전쟁을 피하자는 수작이다. 전쟁이 터져 나오도록 일을 만들면서도, (큰)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하는 임시방편의 꾀책이다. 그것은 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의 부담은 점점 늘어가고 문화의 발달은 방해를 받는다”(12-16, ※()안은 주석은 글쓴이가

37) 함석헌의 평화론에 대해서는 함석헌평화연구소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론》(모시는 사람들, 2018, 41쪽)을 참조 바람.
38) 김대식, 앞의 책, 41쪽.

주해한 것임, 이하 같음). 함석헌은 전쟁이 없어야 인류가 문화발달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문화의 발전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전쟁이 없을 때 문화가 발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이 벌이는 전쟁은 “문화발전의 차단 내지 저해 요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평화의 적은 전쟁이고,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에만 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주장입니다. 함석헌은 그리스에서 발생한 이 민주주의가 곧 평화의 상징으로 보았고 전쟁이 없을 때 발생한 대표적인 문화발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석헌은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물자의 부족. 둘째, 지배자의 권력욕. 셋째, 양육강식에 의거한 생존경쟁사상. 넷째, 종교이기주의 등입니다(12-23~26). 이러한 전쟁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네 가지 이유를 한 마디로 축약하면 강대국의 패권주의(곧, 강대국의 이익 추구)가 됩니다. 함석헌의 이러한 인식과 파악은 오늘날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대국 권력자들의 패권주의가 아니면 지구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석헌은 전쟁의 원인을 분석한 다음, 평화주의 사상을 펴냅니다. 곧 “평화는 인류의 자유의지를 통한 윤리행동”라고 규정합니다. “누구보다도 세계평화를 부르짖어야 할 우리나라에 평화운동이 도무지 없는 것은 놀랄 일이다.”, “공존(共存)만이 생존(生存)”, “평화만이 유일한 공존”(12-17)이라는 주장을 펴냅니다. 그리고 평화공존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인류의 자유의지를 통해 오는 윤리행동”이라고 평화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석헌의 평화사상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오는 윤리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함석헌은 또 평화의 본질에 대하여 《中庸》(중용)의 ‘화’(和=平和)로 풀이하었다. 그리고 화는 알파요 오메가다. Alpha and Omega(12-45)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의 주석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화’가 알파요 오메가라면 ‘화’는 곧 ‘천지창조주’(天地創造主; 요한복시록 1장 8절)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함석헌은 평화를 창조주의 ‘본 모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 자체인 창조주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인간임에도 평화공존을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함석헌은 주저 없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국가주의의 폐단’ 때문이라고. 즉 함석헌은 “국가는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함석헌이 말하는 도덕적 존재란 무엇일까? “남에 대한 믿음이 인격이고, 양보는 미덕이다. 믿고 양보하는 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인격의

본질로 도덕적 존재만이 갖는다. 그런데 개인은 도덕적 존재이지만, 국가는 도덕적 존재가 아니”(12-18)라고 말합니다. 곧 함석헌은 인간은 양심을 가진 도덕적 존재이고, 양심을 가진 도덕적 인간만이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양심이 없는 존재로,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끼리는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함석헌이 말하는 국가라는 존재는 곧 권력기관을 말합니다. 그의 평화를 사랑하는 아나키즘적 발상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함석헌은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진화에서도 찾습니다. “인류가 항상 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진화를 모르고 변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 할 것입니다. 삼강오륜을 찾고, 임금을 찾고, 약육강식을 찾고, 우생학적인 생존경쟁을 찾는 것은 오류입니다”(12-34). 이렇게 함석헌은 ‘관념의 진화’를 주장합니다. 함석헌은 이런 ‘관념의 진화’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인간 사고의 시대적 변화(진화)라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곧 씨울이 전개해야 할 관념의 진화로써 평화운동의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 “웃으며 싸우자”(12- 169~210) 2) 사랑으로 해야 한다(12-186). 3) 즉시 해야 한다(now here, 12-189). 인간은 본성이 착하므로, 비폭력으로, 그리고 웃으며 평화롭게 한다면 평화운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도 언제든 가장 중요한 시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12-189)라고 함으로써, 평화운동은 지체할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³⁹⁾

함석헌의 이러한 평화주의 사상은 그를 무교회주의자로 만들어냅니다. 함석헌은 3·1민중기의 이후부터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있을 때는 민족이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할 텐데 3·1운동이 지나면서 일제의 통치 방향이 변하고 문화정치를 하니까 교회 내에 산 믿음이 사라지고 교리를 보다 중요시 여기는 듯하다”(25-95)라는 교회인식에서 함석헌은 무교회신앙(형식적 신앙인에서 정신적 신앙인)을 갖게 됩니다. 또 그는 다시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순수하게 믿었지요. 3·1운동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천당 간다는 소리만 하지 역사가 어떻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39) 황보윤식, 〈함석헌의 세계평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론적 검토〉 (함석헌학회편, 《생각과 실천》 2, 2012)

대해서는 당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영 불만스러웠지요....(25-115) 그리고 그는 “현실교회(상징적인 권력공간)는 바리새적 위선이 들어있다. 교회주의는 바리새주의다...하나님의 공교회가 가증한 개인주의자들로 오염되어 있다”(18-204)라고 인식함으로써 함석헌은 종교적 본질주의자에서 신앙적 본질주의자로 사상적 진화를 해나갑니다. 곧 함석헌이 말하는 무교회의 무(無)라는 말은 절대적 부재(不在)와 존재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함석헌은 당시의 교회라는 공간(존재)을 제도적/체제적/교리적/조직적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한한 권력공간으로서 교회는 무한의 존재인 신(하느님)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함석헌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그가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 Non-Congregationalism), 곧 ‘종교적 권력’과 ‘교회적 권위’가 없는 평화의 공간으로 간 까닭입니다.⁴⁰⁾

마무리 말

이제까지, 3·1민중기의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민족주의와 3·1민중기의, 함석헌의 그리스도교 민족주의와 3·1민중기의 그리고 끝으로 3·1민중기의 이후 나타나는 함석헌의 평화주의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민중기의’라고 쓴 것은 절대적 통치자 그것도 일제 침략권력자에게 빼앗긴 자주적 국권과 천부적 인권을 되찾으려는 민중의 자각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일으킨 ‘민족해방’과 일제의 탄압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대중적 봉기를 ‘민중기의’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1민중기의의 ‘동인론’을 살펴봄으로서 3·1민중기의가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 3·1민중기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리스도교인은 그 사상적 배경으로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민중기의는 그리스도교인의 근대학교를 통한 실력양성운동으로 축적된 ‘민족내부에 내재된 독립역량론’을 내적 동인으로 하고, 당시 세계의 사상조류로 나타나고 있던 민족자결론(러시아혁명과 월슨의 14개조 평화원칙, 세계1차대전에서 공리주의의 승리가 융합되어 나타난)을 외적 동인으로 하여 3·1민중기의가 일어났다는 역사일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이제까지 3·1민중기의의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외적 동인이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합니다. 곧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과 월슨의 14개조 평화원칙,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공리주의)

40) 김대식, 앞의 책, 72쪽 참조.

등 이러한 세계정세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민족자결주의가 외적 동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식민지민족주의로써 그리스도교민족주의가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1971년 김양선이 그 서단을 만듭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독자적인 연구영역이었던 그리스도교 교회사와 한국근현대사가 서로 접목되면서 역사학적인 문헌고증을 통해 연구성과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식민지조선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일제, 그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과 자유를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소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교회는 일제침략이라는 공통된 시대적 상황에서 식민지민족주의와 그리스도교 정신이 서로 상응하여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민족주의는 민족 내부에 민족의식/자주의식/근대의식/해방의식 등 주체적 독립역량을 축적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에 의하여 축적된 주체적 독립운동역량이 국제적 변혁분위기(시대사조로서 민족자결주의의 등장)를 기회로 이용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일으킨 것이 3·1민중기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함석헌의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함석헌의 3·1민중기의 참여와 그후 그의 사상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함석헌이 ‘그리스도교민족주의’를 갖게 되는 배경은 그의 가정환경에서 찾아집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권력으로부터 냉대를 받아왔던 서북 지역에 그리스도교(개신교)가 전파되고 이의 영향으로 함석헌의 선대들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선진교육을 받아온 혈족들이 민족주의 사상을 포지하면서 3·1민중기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함석헌 집안의 신앙적 배경과 민족적 배경이 함석헌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민족주의자로서 3·1민중기의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후 함석헌은 3·1민중기를 비폭력/평화운동으로 평가하면서 이후 자신은 민족주의자에서 서서히 평화주의자로 사상적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후 내내 함석헌은 근대주의에서 나온 민족주의/국가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냅니다. 그런데 이 평화운동은 지구의 지역적 운동이 아닌 전체적 운동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합니다(12-83). 그래서 함석헌은

전체주의(全體主義)와 세계주의(世界主義)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함석헌이 말하는 ‘전체주의’는 20세기 전반기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파쇼국가들이 가졌던 획일적 ‘전체주의’(fascism; 社會帝國主義 Social Imperialism)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지역적, 민족국가적 개념을 탈피하는 ‘타자와 공존’이라는 대명제를 갖는 세계주의를 말합니다. 함석헌이 말하는 세계주의는 국가지상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평등과 지역자치의 ‘나라공동체’이며 ‘평화공동체’를 말합니다.

끝으로 함석헌의 이 말을 기억해 둡시다. “금년이 3·1운동의 예순 돌이니 한 번 크게 뜻 있는 기념을 하여 침체해 가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날이 심해가는 사회부정을 일소하고 두 동강난 나라를 어서 빨리 하나로 묶고, 남북이 하나로 어우러져 회개와 용서의 눈물로 이 강산을 적시고 감사와 희망의 노래로 저 산천초목을 들뛰게 하며, 그리하여 세계의 모든 압박당하고 찢어진 민족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합시다”(9-268).

참고자료 및 문헌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3일자.

《獨立新聞》 1898년 12월 23일자 논설.

姜德相, 〈朝鮮に於ける獨立運動に關する件〉, 《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ニ關スル狀況》
(《現代史資料- 三·一運動編》68, (國學資料院, 2004.)

姜萬吉, 《韓國近代史》(創作과批評社, 1984.)

고정휴, 〈3·1운동과 미국〉, 《3·1민중해방운동연구》(청년사, 1999.)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론》(모시는사람들, 2018.)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사상 : 비폭력주의와 협화주의(協和主義)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16.)

김성수, 〈함석헌의 비폭력사상과 종교〉, 《우원사상논총》(강남대학교, 2015.)

김승태,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다산글방,
1994.)

김영호,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 사상과 그 실천 전략〉, 《우원사상논총》(강남대학교, 2015.)

김영호, 《함석헌사상 깊이읽기》 1,2,3 (한길사, 2016)

金鎮鳳, 〈3·1獨立運動〉, 윤병석외, 《韓民族의 獨立運動史》(韓國民族運動史硏究會, 1990)

金良善, 〈3·1運動과 基督教- 啓蒙과 抵抗의 十字架-〉, 『韓國現代史』 8 新社會 100年(新丘文化史,
1971)

金容福, 〈3·1運動과 한국그리스도교의 告白信仰〉, 《神學思想》 51 (1985, 가을)

김형석, 〈한국기독교와 3·1운동〉,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종로서적, 1992)

남강문화재단, 《南岡 李承薰과 민족운동》(남강문화재단출판부, 1988)

노치준, 〈한말의 근대화와 역사의식〉, 《역사비평》 1994 겨울호.

민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関庚培, 〈韓國基督教와 그 民族教會成立〉, 《論文集》(崇田大學校, 1978)

박재순, 〈동아시아와 함석헌의 평화사상〉,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일본사상》, 2009.

박철호, 〈인천의 3·1독립만세운동과 감리교회〉(인천생명평화포럼에서 발표문, 2019. 2.14)

- 류청하,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韓國近代民族運動史》 1980.
- 류청하, 〈三·一運動前の朝鮮國內狀況, 1915~1919〉, 《現代史資料—三, 一運動編》 68, (國學資料院, 2004)
-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오월, 1998)
- 서울노회사편찬위원회(책임집필 윤경로), 《서울老會의 歷史》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成大慶, 〈三·一運動時期의 韓國勞動者의 活動에 對하여〉, 《歷史學報》 41 (1969)
- C.W. 켈달/신복룡, 《한국독립운동의 진상》 (집문당, 1999)
- 시승호, 《함석헌의 평화사상과 실천》 (정보협성대학교 2010)
- 慎鏞廈, 《日帝強占期 韓國民族史》 상(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慎鏞廈, 〈문화운동〉, 尹炳奭외, 《韓民族의 獨立運動史》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1990)
- 慎鏞廈,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민족자결주의 및 러시아혁명 영향의 문제〉, 《한국근대의 민족운동과사회운동》 (문학과지성사, 2001)
- 慎鏞廈, 《3·1運動과 獨立運動의 社會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양현혜, 〈그리스도교와 민족주의의 문제〉,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74권, 1991.
- 역사학연구소, 《강좌한국근현대사》 (폴빛, 1995)
- 유석성, 〈함석헌의 비폭력저항과 종교적 평화주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08.
- 유석성 〈함석헌과 본회퍼의 평화사상〉, 《기독교사상》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2007.)
- 尹慶老, 《105인人事件과 新民會研究》 (一志社, 1990.)
- 윤경로, 〈서구근대문명의 수용과 애국계몽운동〉, 《近代文明과 韓國近代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윤경로, 〈3·1운동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3·1운동과 한국교회의 역사참여》(대한예수교총회, 1989.
- 윤경로,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역사성과 현재성〉, 《기독교사상》, 2018.1.
-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基督教思想》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이만열, 《항일독립운동과 3·1운동》 (함석헌평화포럼, 2011.)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3·1운동〉, 《基督教思想》(대한기독교서회, 1990.)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지식산업사, 1981.)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지식산업사, 1991.)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動態化과정〉, 《민족주의와 기독교》(민중사 1981.)
-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혜안, 2001.)
- 장동민, 〈21세기를 위한 평화주의자 함석헌〉, 《백석저널》(백석기독교학회, 2003.)
- 조 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정세〉, 《3·1민중해방운동연구》(청년사, 1989.)
- 함석헌, 《함석헌저작집》1~30(한길사, 2009.)
- 허동현, 〈3·1운동에 미친 민족대표의 역할 재조명-기독교계 대표 오화영과 유여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46집, 2006.
- 황보윤식, 〈3·1民衆起義 動因論과 그리스도교 關係를 考察함〉, 《한국개신교가 한국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한국신학연구소, 2005.)
- 황보윤식, 〈함석헌의 세계평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론적 검토〉(함석헌학회편, 《생각과 실천》
2, 2012)
- 황보윤식, 〈함석헌의 사관-신의사관〉, 《한국기독교와 역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3·1 독립운동과 세계평화유산

제1분과_종교분과

■ 좌장 : 조성윤(제주대)

▣ 정혜정 | 원광대

3·1운동에서의 공화와 평화 - 신국가수립운동과의 연맥을 중심으로

▣ 도현섭 | 선학유피대학원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에 대한 연구

▣ 토론 : 이재일(선문대), 나권수(대진대)

3·1운동에서의 공화와 평화

- 신국가수립운동과의 연맥을 중심으로 -

정혜정 (원광대)

목 차

- I. 서론
- II. 기존연구의 검토
- III. 신국가수립운동에서 유기체적 국가와 자유권
- IV. 3·1운동과 신국가 수립운동
- V. 3·1운동에서의 공화와 평화

I. 서론

최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계마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¹⁾ 3·1운동은 천도교가 10년 전부터 준비하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대 애국자강운동의 신국가수립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3·1운동은 그 기획과 준비과정에서부터 임시정부수립(假政府)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의 자주적 독립국가의 선언이었고, 이는 조선인의 자유권과 자주독립국가임을 만방에 선포한 역사의 창출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미독립선언서」 첫 머리에 제시된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宣言)”함을 신국가설립운동의 연장선과 계승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조선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천연권으로서 신국가설립운동에서 지향했던 자연법상의 자유권과 유기체적 국가론의 공화정체에 바

1) 천도교 측에서는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 운동노선의 결정과정과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각 종교계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합시켰는지를 재조명하였다. 기독교 측에서도 평양에서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제일 먼저 부르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불교의 백용성이 태극기를 흔들자는 제안과 더불어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만세의 호칭을 쓰자고 했다는 등 여러 연구들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는 3·1운동의 33인을 역사적으로 비중 있게 다룸과 동시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조직적 활동을 비중 있게 조명하였다.

탕한 것이었다. 독립선언문에도 명시된 것처럼 “이천만 민중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여 이를 포명(佈明)함”에서 민주공화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고, 이는 곧 이천만 국민전체의 합심과 합의에 의해 실시된 민주공화의 첫 출발이었다. 그리고 이는 “인류행복에 필요(必要)한 계단(階段)”으로서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었다.

기존연구는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을 3·1운동과 분리시켜 역사적으로 주목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시기의 국가수립운동을 서구 틀에 맞추어 입헌군주제의 옹호나 국가주의/전체주의로 폄하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검토와 더불어 개화기 국가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각 개념의 용례를 추적하여 서구의 국가사상이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에는 전통적 개념이나 시대적 상황이 교차되는 것이므로 변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변용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이 국가, 권리, 자연법, 자유, 공화 등의 번역어였다. 예컨대 자연법의 경우 성법(性法), 혹은 양지양능, 혹은 동양적 심성론에 빗대어 이해되었음을 엿 볼 수 있고, 자연법에서 명시하는 자유라는 것도 전통 개념인 자유자재로부터 설명의 근거를 둔 것이었다. 국가 개념 또한 家개념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민주공화제나 입헌군주제를 동격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right’가 초기에는 권리(權利)가 아닌 권의(權義), 혹은 통의(通義)로 이해되었음도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민주공화체제의 공화개념을 분석함에는 천도교의 이상준과 더불어 당시의 신문이나 학회지 등을 활용하고 이들 개념의 번역과 이해를 통해 한국 스스로의 자유권과 조선독립이 세계평화와 맞물려 있는 것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존연구의 검토

1. ‘국가주의’ 프레임

개화기에 수용된 서구 국가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의 국가론보다는 블룬칠리의 유기체적 국가론이 보다 지배적이었다. 이는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나 양계초의 영향일수도 있지만 동아시아 삼국이 공통적으로 갖는 서세동점이라는 시대적 인식이 관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블룬칠리가 말하는 국가유기체론은 국가를 인격체들이 얽혀 있는 하나의 구성물로 보는

것이고 그 실제 토대는 인민이며 인민이란 분산된 다수 개인이 아니라 정치적 지체로 정렬되는 총체였다. 그리고 그 총체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최상위 일원이고 개개의 지체는 각각의 본성에 걸 맞는 지위와 과제를 지니는 위계적 형태를 지녔다. 그러나 한중일의 스펙트럼은 불분칠리와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²⁾ 불분칠리를 국가주의적 유기체사상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당시의 국가수립운동도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국가사상의 전개를 서구 국가주의로서 전제정치와 다를 바 없는 ‘국민 없는 국가’였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신국가수립운동도 폄하시키고 있다. 특히 김경희는 국가유기체론이 ‘전체와 통일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개별 시민이 아닌 전체로서의 국민과 국가의 단일성이 강조’되었으며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나 시민 개개인의 관심사는 무시될 상황에 놓일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즉 공공복리 앞에서 개별이익은 그 목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³⁾

일본을 통해 독일식 정치학을 수용한 이들은 개인이나 인민 중심의 계약론보다는 유기체로서 국가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군주 중심의 왕정을 사고하였다.⁴⁾

또한 김도형은 국가유기체설과 입헌군주제가 선호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배층의 사고를 반영하여 우민관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층 위주의 개혁방안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⁵⁾고 말한다. 박노자는 유교사회가 국민국가로 가면서 모두가 애국의 주체가 될 권리를 얻었지만 과거의 정심수기(正心修己)의 자율성은 부여되지 않고 대신 모험진취 정신이나 상무정신이 차지하게 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⁶⁾ 그리고 이것이 박정희 시대 국가주의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즉 자율성이 설 자리가 없는 정신적 통합만 강조된 국가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 국가유기체설의 수용은 불분칠리의 것을 자주독립국가의 방편으로 받아들였지

2)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김경희,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과 건국헌법」, 『오토피아』 31, 2016, 41-66쪽;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4; 김동택, 「중세적 인식론의 전환과 새로운 담론의 모색 근대 국민과 국가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1, 2002, 357-388쪽; 김효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초 성립의 역사』, 파주: 돌베개, 2013 등이 있다.

3) 김경희, 위의 글, 44쪽.

4) 김경희, 위의 글, 46쪽.

5) 김도형, 앞의 책, 103-108쪽.

6) 박노자, 「국가 유기체론과 개명전제(開明專制)」, 『인물과 사상』 83, 2005, 85쪽.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주의로의 이행이 아니라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고 국가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급히 새로운 국가체제를 희망하는 발로에서 주목된 것이었다. 국민의 힘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계약론적 국가론보다는 유기체적 국가론을 선호한 것은 힘의 결집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지식인들이 강조점을 둔 것은 자유권의 민권이었다. 개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국가주의를 표방하거나 군주와 인민을 머리와 몸통에 배당시켜 수직적 위계의 유기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에서 국권회복을 찾았고 개인의 성장에서 국가의 성장을 찾았다. 분명 블룬칠리의 학설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이를 번역한 정인호나 나진·김상현 등에 의해서 소개된 블룬칠리의 학설에는 해석적 변용이 가해졌다. 그리고 오상준에 의해서는 동학(천도교) 버전으로 유기체적 국가론이 재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연구가 간과한 것은 당시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국가사상이 파시즘적, 전체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인민의사의 합의가 우선되는 국가유기체였다는 점이고, 국가와 인민의 관계가 머리와 지체의 관계가 아니라 뼈와 살의 관계로 인식되었으며⁷⁾ 정신적 단결로 군대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국가유기체설을 “국민이라는 것은 그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의 동일함 이외에 또한 반드시 동일한 정신을 가지며 동일한 이해를 느끼며 동일한 행동을 하고, 그 안에서의 조직은 한 몸의 골격과 같고, 그 밖에서 발휘되는 정신은 한 군대와도 같은 것”⁸⁾이라 하였다. 동일한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의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이해와 행동을 통해 발휘되는 정신은 바로 군대와 같은 힘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국가유기체설을 주장하는 글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정신적 단결 속에서 국가의 힘을 도모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요컨대 제국신문, 황성신문, 만세보, 대한매일신보, 각종 학회지 나 언론·출판활동에서 유기체적 국가사상을 강조해 나간 것은 국권(민권)회복과 신 국가건설이 절실했던 시대적 위기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천도교 오상준도 블룬칠리(Bluntschli, 1808-1881)를 평가하면서 “그의 저서 한 권이 영국의 정치 개혁을 이루고 영국을 부강케 한 것”⁹⁾이라 하여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국가를 모색함에서 중요한 매개로 삼았고, 자신의 『초등교서』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

7) 김성희는 국가는 유기체적 조직이며 인민의 근육과 관절이 집합하여 착종된 구조라 하였다. 오상준의 경우도 같은 입장이다.

8) 「민족과 국민의 구별」, 『대한매일신보』, 1908.7.30.

9) 오상준, 앞의 책, 115쪽.

하였다. 블룬칠리의 학설은 오상준 뿐만 아니라 한국 개화기 국가사상의 수용에서 국망의 위기를 타개할 정치사상으로 간주되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입헌군주제'로의 규정

1900년대의 국가수립운동은 민권운동과 국가사상의 전개가 그 핵심을 이룬다.¹⁰⁾ 개화기 당시 논의된 국가체제는 전제체제, 입헌군주제, 공화민주체제를 꼽을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화체제는 루소류의 사회계약론보다는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론을 통해 논의된 바가 크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개화기 한국이 선호했던 서구 정치제도가 입헌군주제였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국가주의와의 연장 속에서 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한성순보에 처음 소개된 정치제도는 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제 등을 소개할 뿐¹¹⁾ 어느 한 정치체제를 주장하여 평가를 표방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입헌군주제는 입헌정체로 지칭되었고 공화제는 민주정체로 소개되었다. 애국가장기의 신문이나 잡지 논설에서도 보면 정치체제에 대한 소개이지 특정정체를 평가한 것은 많지가 않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개화기 지식인들이 영국의 입헌군주제 제도를 군민동치, 또는 합중공화로 이해하였고, 조선의 절대군주제를 영국식 입헌군주제로 발전시킬 것을 최대의 희망과 과제로 삼았다고 주장한다.¹²⁾ 특히 독립협회가 공화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수궁하기 어려우며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가 당시의 지배적인 이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유길준과 헌정연구회를 꼽았다.¹³⁾ 그러나 190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대다수 지식인들은 민주공화체제를 지향하였다. 그리고 유길준의 글도 잘 보면 “민주공화 체제는 세습하는 임금만 없을 뿐이고 입헌군주 정치체제와 같다”¹⁴⁾고 보아 입헌군주제를 민주공화에 방점을 두어 이를 결합시킨 측면이 강하다.¹⁵⁾ 또한 당시 국권의 위기 상황으로 볼 때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을 전복시키기보다는 군주와 인민이 함께 통치하는 군민동치를 자연스럽게 기술했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법률관계

10) 동학-천도교는 독립협회의 개화파와 인적 교류를 행하면서 민주국가건설을 지향하였는데 공화제의 국가체제를 둘러싼 국가론의 보급과 민권의식을 고양시키는 언론/출판운동을 전개하였다.

11) 『한성순보』, 1883.11.10.

12)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2000, 25쪽.

13) 『헌정연구회취지서』, 『한국근현대사연구』 5, 한국근현대사학회, 1996, 271-282쪽 수록.

14) 유길준, 김태준 역, 『서유견문』, 박영사, 1976, 165쪽.

15) 유길준의 동생 유성준도 당시 일본을 군주국체, 법국을 공화국체로 구분하면서 입헌군주정체를 주장했는데 이 역시 군주, 귀족, 공화 삼정체의 혼용, 화합, 절충으로서 제시된 것이다(유성준, 『법학통론』, 박문사, 1905, 51쪽).

논설이나 서적에서는 오히려 입헌군주제보다 민주공화제가 더 강조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체제에서 민주공화제를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공화제에 대한 끊임없는 소개와 설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구상할 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그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 노력은 3·1운동을 통해 국가독립의 정당성을 선언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헌정연구회 역시 입헌군주제를 이상으로 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다. 헌정연구회에서 발간한 『국민수지(國民須知)』 서두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공동체로서 군주 1인의 사유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고, 군주보다 인민이 우선되며 군주의 멸망은 곧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국민과 국토가 박탈당할 때를 비로소 국가의 멸망이라 하여 국민을 국가의 주체로 보고 있다.¹⁶⁾ 그리고 군주는 “국가의 고용인”으로서 국고의 관리자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군주국에는 제왕이 있고, 공화국에는 통령이 있어 백반 정령을 거행하는 대소관리가 국가사무를 변리하는 것”¹⁷⁾이라 하여 양 체제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도 입헌군주제를 공화정체의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군주보다는 국민에게 초점두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김동택은 국민수지¹⁸⁾ 내용을 두고 “국가의 문제가 황실이나 정부의 문제이지 국민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민 또한 국가주권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한다.¹⁹⁾ 특히 국민수지를 국민 없는 국민, 국민의 국가가 아닌 국가의 국민, 혹은 군주 한 개인의 국가주의 선동 책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다소 지나친 해석이라 할 것이다. 군주는 한 나라의 지존에 거하고 최대권을 가지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고용인으로서 국민이 관제하는 국가사무를 통치하기 위하여 지존·최대자가 될 뿐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수지는 분명 “국가와 주권은 분리될 수 없고 국가는 중민(衆民)의 합성체(合成體)요 주권은 중민의 합성력(合成力)”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민수지는 당시 망국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주권의 권리를 수호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국의 자주인”이 될 것을 호소한 독립운동 책자라 할 것이다.

16) 헌정연구회, 『국민수지』, 1904. 제장(현재, 『유년필독』, 아세아문화사, 1977에 수록).

17) 위의 책, 제2장.

18) 국민수지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동택의 연구 외에 최기영,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일조각, 1977; 이건상 외, 『일본의 근대화와 조선의 근대』, 모시는사람들, 2013, 참고.

19) 김동택, 「국민수지를 통해 본 근대 국민」,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208-219쪽.

Ⅲ. 신국가수립운동에서 유기체적 국가와 자유권

1. 신국가 수립운동에서 국가의 유기체적 개념

본래 국가란 하나의 역사적 관념의 소산으로서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 통하는 정치적 질서 형식의 보편적인 통상개념으로 말하여진다.²⁰⁾ 그러나 한국과 같은 동양전통에서 국가는 하나의 큰 집이며 가족(家)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채호는 국가를 한 가족과 같은 결집체로 보았다. 국가란 가족 두 글자를 대서(大書)한 것에 불과하다²¹⁾하여 국가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인식한 것이다.

국가란 곧 한 집 족속을 크게 말한 바라. ... 시조 단군이 태백산에 탄생하샤 이 나라를 개창하샤 후세 자손에게 주시니 삼천리 강토는 그 집 산업이며 4천년 역사는 그 집 족보이며 역대 제왕은 그 집 종통이요 지경을 둘러싼 산하는 곧 그 집 울타리이라. 오직 이천만 자손이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함께 살고 여기서 함께 의지식지하고 여기서 웃고 슬퍼함을 함께 하나니 집과 나라가 무엇이 다르리요. 저 명군 어진 재상 영웅 호걸은 이 가를 지키는(保家)의 肖子요 獨夫, 간신, 부패한 관리(贓吏)는 곧 패가시킨 悖孫이며 을지문덕의 싸움과 양만춘의 외적을 물리침은 家의 難을 구한 자이며 ... 현재 국민의 조상되는 古人이 선인을 심든지 악인을 심든지 그 결과를 먹는 자는 모두 古人의 자손되는 현재국민이다. 미래 국민의 조상될 금인이 선인을 심든지 악인을 심든지 그 결과를 먹을 자는 또한 모두 금인의 자손되는 미래 국민이라. 그러므로 국가는 곧 큰집의 족속(壹大家族)이라 하는 바니...²²⁾

신채호는 국가를 한 가족으로 설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과의 합성체임을 이해시킨 바 있다. 역사의 영웅호걸들은 우리 집을 지킨 자들이 되고, 패악의 무리들은 우리 집을 패가시킨 자들이 된다. 국가는 한 가족, 한 울타리(집)로서 함께 살고 고락을 같이하는 곳으로서 유기체적 국가이다. 안중화 역시 불륜칠리의 국가학을 소개하면서 국가라는 이름이 처음에 일가(一家), 일족(一族)에서 나온 것에 빗대어 번역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문명제국은 모두 인민의 국가이

20)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앞의 책, 118쪽.

21)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대한협회회보』 2, 1908.05.25., 5쪽;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8쪽.

22) 「國家는 卽一家族」, 『대한매일신보』, 1908.7.31.;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78-279쪽.

므로 “國中の 民이 합하여 일체를 이루고(合成一體) 스스로 그 이치를 판단하고 스스로 그 뜻을 마땅히 하며 스스로 그 정치를 행하는 것”²³⁾이라 하였다. 안중화 역시 불륜칠리에게서 국가 개념을 가져왔지만 그가 제시한 국가개념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수지』 제1장 국가본의²⁴⁾에서도 ‘국가는 국민만성(國民萬姓-만성은 만민)의 공동체’이지 군주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²⁵⁾, ‘國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요 家는 인민을 뜻하는 것’으로서 國은 일정한 영역, 家는 만 가족(萬姓)의 결합을 뜻하는 겨레(동포)를 의미했다. 국민수지에서 말하는 국가는 “일정한 토지에 사는 인민이 결합하여 이루는 겨레공동체”²⁶⁾라 할 수 있다.

원래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國’이란 울타리(영토)가 아니라 ‘君’을 의미했다. 군주는 나랏님으로 불렸고 “나라에서 하신말씀, 나라에서 하실 일”이라 하여 나라일은 민중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정치도 군주의 일이요 법률도 군주의 물이요, 종교와 도덕도 군주의 사유물이 될 뿐이었다. 신채호는 이러한 유치한 시대의 산물을 오늘날에도 가져와 군주와 國을 일치시키려는 자가 많다하여 이를 한탄한 바 있다.²⁷⁾ 신채호는 이렇게 국가에서 國개념을 君이 아닌 一家族의 의미로 전환시켰다.

한편 가(家) 또한 기존 전통의 개념을 그대로 취한 것만은 아니었다. 기존의 家는 곧 가족주의였다. 그러므로 가족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도 적지 않았다. “삼천리 강토가 물에 빠졌는데 나의 한 집만 안보하기 어렵고 인민을 몰아다가 맹렬한 불 속에 던져놓고 나의 한 목숨만 온전하기를 구할 수 없는 것인데, 한국 사람은 배안에서 풍랑을 만난 이 시대를 당하여도 오히려 가족의 사상만 뱃속에 가득하다”는 비판이다. 가족주의는 자기 가족에만 매몰되어 국가의 안위는 묻지 않고 한 집만 무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이천만의 인구를 이천만의 각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서는 비록 국민이 단결하여 국민의 사업을 행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고, 동포사상도 발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의 사상을 버리고 큰 가족 국가의 사상을 두며 한 집의 조상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의 조상되는 단군을 위하며 한 집 자손만 사랑하지

23) 伯倫知理著, 안중화 역, 『國家學綱領(1907)』, 이 책은 양계초(1880-1932)가 번역한 것을 안중화가 다시 우리말과 한자를 섞어서 번역한 것이다.

24) 해외유객, 「국가의 본의」, 『대한자강화월보』 3, 1906, 54-56쪽.

25) 국가란 군주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민과 사직 그리고 군주 가운데 인민이 가장 앞서고 중한 것임을 말한다는 점에서도 불륜칠리가 말한 국가개념과 차이가 있다.

26) 『국민수지』, 1-2쪽(김효전, 앞의 책, 422-431 수록).

27) 신채호, 「君과 國」, 『대한매일신보』, 18910.1.29.;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49쪽.

말고 곧 전국의 조상, 단군의 자손까지 사랑하며 한 집안 재산만 아끼지 말고 전체 재산을 아끼라”²⁸⁾하였다. 동포사상은 한 가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범주로 한다. 이는 개별적 가족주의를 타파함과 동시에 동포사상의 발달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당시 지식인들은 ‘한 가족’이라는 사고를 매개로 유기체적 국가개념을 이해했고 애국심과 동포애를 촉구해 나갔다.

2. 신국가 수립운동에서 자연법과 자유권

1) 자연법과 자유

조선에 서구 자연법이 수용된 것은 카톨릭의 전래에 따른 것으로 주장된다. 예컨대 18C 말에 이미 천주교 전래에 의해 자연법 의식이 생겨났고, 이는 천주교리문답의 신앙고백에서 양심법, 마음법으로 이해되었다. 1791년에 순교한 윤지충은 자연법을 천주의 명으로 이해하였다.²⁹⁾ 윤지충이 자연법을 천주의 명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천주가 사람을 자신의 모상(肖像)대로 내셨다”함에 근거를 둔 것이고, 사람에게 “본성에 적합한 지력(知力)과 자유의지” 뿐만 아니라 “초성(超性)은혜와 과성(過性)은혜”³⁰⁾를 부여 하였기에 천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은혜를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에 의한 자연법 이해의 맥락은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천주성이 인간에게도 부여되어 있고 이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이 없는 천당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천주의 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권리로 이해되었다.

또한 당시 소개된 국제법 관계 문헌에서는 자연법이 “성법(性法)”으로 번역되어 조선에 유포되었고, 특히 『만국공법』으로부터는 모든 나라의 자연권으로서 자주와 평등의 권리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연법사상은 천부인권설의 형태로 개화자강사상가들에 의해 보급되었다. 1900년대에 오면 자연법은 사람의 권의(權義)로 이해되었는데 설태희는 “무릇 하늘이 민을 낼 때에 균등히 자유를 부여하고, 세계에 국가가 생길 때에 각각이 독립하였다.”³¹⁾ 하여 ‘천강생민(天降生民)’의 유교적 용어 위에 “민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을 하늘이 내린 권리로 이해

28) 「가족 사상을 타파함」, 『대한매일신보』, 1908.9.4.; 단재신체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체호 전집』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89쪽.

29)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 1982, 412쪽.

30) 노기남 편집, 『漢文問答』, 가톨릭출판사, 1959, 25-26쪽. 여기서 초성은혜란 성종(聖寵)과 성덕(聖德)으로 인하여 사람이 천당영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은혜를 말한다. 그리고 과성은혜란 사람이 사욕편정(邪慾偏情)이 없어 지혜가 밝고 고통이 없으며 죽지 않는 은혜를 말한다(같은 책, 26쪽).

31) 설태희, 「拋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 『대한자강회월보』 6, 대한자강회, 1907, 광무10년(1906), 19쪽.

하였다.³²⁾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권리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고 억압정치의 학정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온 조선의 민이었음을 한탄하면서, 그 자유의 상실은 곧 국가의 권리도 잃는 것이기에 ‘국망의 위기가 자유의 상실에서 온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연권이 민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독립도 포함하는 천부권’이라는 점이다. 이 자연권은 인간 내부의 천성과 맞물려 한 개체가 국가와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 국가이해를 낳게 된다.

또한 설태희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중국의 형률을 모방함이 많아 법사(法史)라 칭하거나 참고할 것이 전혀 없고, 도덕으로만 내면의 심의(心意) 방면을 지도함이 있을 뿐 법학으로써 외부의 동작활용에 규범짓는 것은 지극히 박약하다”³³⁾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민은 타성(惰性)을 이루고 정치는 압제로 기울어 공리(公理)를 잃었다고 비판하였다. 인민이 타성을 이룸은 천부의 성정을 활용하지 못한 까닭에 있고, 이는 곧 애국심의 자멸을 낳은 것이기에 인간이 천부권의 자유를 부여받아도 이를 누릴 수 없다면 권리라 칭할 것도 없는 것이라 하였다.³⁴⁾ 그러므로 법률이 있어야 천부권도 보유(保有)되는 것이고, 현 세계문명 제국은 민주정체가 있으며 보다 다수를 이루는 것은 헌법이므로 이 헌법은 바로 현세의 대동법률이라 하였다. 천부권의 자유를 ‘천부의 성정’과 ‘독립국가에 따르는 애국심’으로 등식화 하고, 모두가 천부의 성정을 누리고 보호한다는 맥락에서 “대동법률”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근대 한국에서 서구식의 권리 개념은 자주와 독립, 국권의 수호와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부여받은 본성적 성정에서 우주만물의 이법과도 통할 수 있는 대동 법률로 설정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여기에는 전통적 의미의 자유자재, 즉 인간 근원의 바탕(천성)을 자각함에서 오는 자유의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자유권과 공화

자유³⁵⁾라는 번역어가 초기에는 자주라고 이해되었듯이 권리(right)도 초기에는 국제사회에

32) 당시 국가의 독립권은 “천부공권(天賦公權)”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中岳山人, 「法律을 不可不學」, 『대한협회회보』 7, 대한협회, 1909, 33쪽.

33) 최석하도 당시 한국에 법률이 없다고 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문명국의 법리와 비교해 볼 때 법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유치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법률이란 본질상 권력자의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국가 생존발달에 필요한 기준이므로 악한 명령과 폭력적인 조규는 법률의 형식을 구비하였다더라도 법리상 법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법률은 국가 자율에 관한 것인데 현금 일제통제하의 법률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최석하, 『韓國法律觀』, 『대한협회월보』 4, 대한협회, 1908).

34) 설태희, 「法律上 人の 權義」, 『대한자강회월보』 8, 대한자강회, 1906, 16-17쪽.

35) 근대 일본의 자유 개념 수용에 대해서는 ‘石田雄, 『일본근대사상사における法と政治』, 岩波書店, 1976, 94-95쪽 참고.

있어서의 국가의 지위에 중점을 두어지면서 권(權), 권의(權義), 통의(通義)로 일컬어졌다. 한국에 권리(權利)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Henry Wheaton(1785-1848)의 국제법 책을 번역한 마틴(W.A.P. Matin)의 『만국공법(1864)』이 들어오면서부터이다.³⁶⁾ 그러나 동양 사람들에게 이를 이해시킴에는 곤란함이 있었다. 각자가 마땅히 얻어야 할 각자의 몫이라는 개념으로서 리(利)를 붙였던 권리가 점차 權理, 權義, 通義로 말해졌다. 동양 전통에서 리라는 것은 권익의 개념으로서 사용되기보다 샅된 이익으로 임혀지는 분위기에서 리보다는 理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權利가 아닌 權理로 사용되었고, 후쿠자와는 權理 외에 權利通義, 또는 줄여서 權義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단순히 權, 義, 혹은 道理, 道 등으로 번역하여 쓰기도 하였다.

1884년 『한성순보』에서 소개된 통의는 자유의 권리를 의미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는 바꿀 수 없는 ‘공통된 의(通義)’가 있어 억조창생이 모두 같다. 이른바 공통된 의란 자유를 추구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 이치는 인력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귀신도 빼앗을 수 없는 것”³⁷⁾이라 하였다. 그러나 점차 1900년대로 넘어가면 권리라는 말도 다수 혼용되었다. 『제국신문』에서는 평등과 자유 및 자주가 권리의 개념으로서 강조되었다. “평등, 자유의 권리를 중히 여긴 후로 여자도 남자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의론이 생기며”³⁸⁾ “인민의 권리가 자유와 자주하는데 있고, 자유는 제 뜻대로 행하여 남의 압제를 받지 아니함이고 자주는 제 몸을 제가 다스려 남의 관할을 받지 않음”³⁹⁾이라 하였다. 또한 “권리라 하는 것이 영어의 뜻은 정당하다는 말이니 정당하다 함은 천지나 성현에게 질문할지라도 조금도 틀릴 것이 없다”⁴⁰⁾하여 정당성으로도 간주되었다.

한편 권리라는 것은 천생권(天生權)과 인제권(人制權) 둘로 나누어 소개되었는데, 천생권이란 모든 인민이 자기의 학식, 기력으로 性命 재산을 스스로 보호함이다.⁴¹⁾ 특히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인민의 권리, 민권개념도 정착되었다. 민권은 곧 국권이라는 말과 동일시되었다.⁴²⁾

36) 한국 개화기 자연권에 대해서는 ‘김효전 앞의 책’과 ‘이영록, 『애국계몽운동기 자연법사상의 구조와 특장』 학회지를 중심으로, 『현대법학의 이론』,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III)』, 1996, 701-716쪽, 참고.

37) 『한성순보』 14, 1884.3.8.(한성순보 번역판,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83, 267쪽.) 이는 후쿠자와가 1866년에 펴낸 『서양사정』에서 따온 것이다(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1, 82쪽).

38) 『제국신문』, 1902.9.29.

39) 『제국신문』, 1902.10.30.

40) 『제국신문』, 1907.7.17.

41) 『황성신문』, 1903.4.9.

42) 김효전 앞의 책, 379쪽.

유옥겸(兪鈺兼)은 자유와 자유권을 구분하고 자유를 법률이 보호하는 자유, 방임하는 자유, 금지하는 자유로 구분하여 이 가운데 법률이 보호하는 자유에만 자유권을 인정하였다.⁴³⁾ 여기서의 자유권은 자연권과 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윤익선은 자연법과 인정법을 법리(法理)와 법률로 배당하고 법리가 자연의 원리원칙이라면 법률은 인류단체의 규칙임을 강조하였다.

법리라 함은 만상을 통어하여 존재한 자연의 원리원칙을 말함이요, 법률이라 함은 인류 단체로부터 제정하고 또는 인지케 하는 것으로 인류단체가 공동생활의 목적을 따르는 행위의 규칙을 말함이라.⁴⁴⁾

법리는 법률의 상위 개념으로서 “법리를 연구하여 얻은 지식으로 그 사회의 적합성을 목적으로 법안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법리가 중시된다. 윤익선이 말한 법리는 유옥겸이 구분한 자유권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성준은 그의 『법학통론』에서 法과 道를 구분하여 윤익선이 말한 법리·법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고 있다. “사람은 만물의 최령자(最靈)로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무한한 자유를 구유하는 것”인데 이는 “안으로는性情의 시비에 구속되지 않고 밖으로는 타인의 욕망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선악 간에 오직 자기의 의향을 따르고 그 의사에 반하는 사상과 행위는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강요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반드시 복종해야 할 두 가지 책무가 있다 하여 이를 내부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나누었다. 그는 내부적 책무를 道라 하고 외부적 책무를 法이라 지칭하였다. 道는 사람의 心意에 관계되고 法은 드러난 외부의 행위를 가지고 규구(規矩)하는 것이기에⁴⁵⁾ 道와 法의 관계는 자연법(自然法)과 인정법(人定法)의 관계와 유사하다. 자연법은 통의로서 누구나가 동일하게 인지하는 감정이기에 생각의 여지없이 卽覺할 수 있는 자연의 대법으로 이해되었다.⁴⁶⁾

43) 유옥겸, 「自由는 何인가」, 『법정학계』 6, 1908, 12쪽.

44) 윤익선, 「법리와 법률」, 『법정학계』 18, 이영록, 「애국계몽운동기 자연법사상의 구조와 특징: 학회지를 중심으로」,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현대법학의 이론』, 707쪽, 재인용.

45) 유성준, 『법학통론』, 박문사, 1905, 2-4쪽.

46) 위의 책, 6-7쪽.

IV. 3·1운동과 신국가 수립운동

블룬칠리의 국가학 수용과 맞물린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은 우리정신인 종교에 바탕하여 국가사상을 고취시켜나간 민권운동이자 공화운동으로서 그 결실이 1919년 3·1운동으로 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00년대 애국자강운동은 민중국가수립을 지향하면서 종교를 주목했고, 이를 근간으로 국가의식을 고취한 시대였다. 분명 3·1운동은 동학혁명에서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고, 또한 3·1운동을 이끌어낸 민중들의 의기는 바로 1900년대부터 시작된 종교운동(정신운동)을 통한 국가의식의 확산으로 가능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종교는 조선독립을 위한 “특별한 정치수단”⁴⁷⁾으로 인식되었다. 대한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을 기초한 조소앙은 종교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힘이 매우 큰 것임을 피력한 바 있다. 요컨대 개화기 종교 개념은 국가사상을 전개하는 맥락에서 생겨난 성격이 강하고, 국가와 종교를 긴밀한 유기적 관련성에서 개념 지어졌다. 오상준 역시 종교란 ‘세계평화의 근원이자 인민정신의 골자요 국가정치의 기관’⁴⁸⁾이라 하였다. 종교는 “우리 정신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나라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정신적 힘으로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었다.

1907년 대한자강회 활동을 펼쳤던 김성희는 국가와 종교, 그리고 교육의 긴밀한 유기적 관련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이 종교를 통해 유일무이의 큰 단체인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종교란 “유일한 자유권을 주로 삼고, 평등권을 보조한 연후에야 그 국가의 종교에 도달할 수 있는 것”⁴⁹⁾이라 하였다. 애국자강운동기에 종교(국교)가 주장되었던 것은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적 힘을 준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힘의 결집을 통하여 자유권의 국권회복을 이루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즉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2천만 동포의 마음속에 민족정신과 정치사상을 확고히 세워 정신적 자강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던 것이다.⁵⁰⁾ 그리고 이는 기미독립선언서에 조선인의 자주와 조선 독립의 자주민으로 자유권을 명시하게 이른 것이다.

47) 조소앙, 『言教論』, 『대한유학생회학보』1, 1907.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517-519쪽.

48) 오상준, 『초등교서』, 1907, 보문관, 15-16쪽.

49) 김성희, 「교육종지 속설」, 『대한자강회월보』 13, 앞의 책, 95쪽.

50) 정혜정, 「3·1운동과 국가문명의 ‘교(敎)’ : 천도교(동학)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0-4, 2018, 249-250쪽.

특히 천도교 오상준의 국가의식의 고취는 1900년대 동학운동의 계승이었고, 1919년 3·1운동의 준비작업이자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하늘정신으로 “우리 겨레의 정신력을 이루어 천만의 입으로 자유가(自由歌)를 부르고, 천만의 손으로 자유기(自由旗)를 잡으며 천만인의 자유혈(自由血)으로써 자유의 적(賊)을 대하자.”⁵¹⁾ 했던 자유의 천권(天權)사상은 3·1운동을 촉구한 사상적 준비였다. 우리겨레의 자유를 점탈(占奪)한 저들(賊)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우리 겨레의 자유를 우리 동포에게 되돌릴 것’이었고, 그 때에야 비로소 ‘나의 하늘이 자유의 하늘(自由天)이요, 나의 땅이 자유의 땅(自由地)이 되어 자유의 천지에 자유인(自由人)⁵²⁾으로 살 수 있는 것임을 비장하게 각오시켰다.

이는 마침내 민중시위운동으로 분출되어 자유가(自由歌)는 실제로 3·1운동 당시 온 겨레의 입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자유가가 되었고, 자유기(自由旗)는 온 겨레의 손으로 태극기를 잡음이 되었으며 자유혈은 온 겨레의 자유피로써 자유를 천명함이 되었다. 3·1운동은 이러한 국가수립의 운동에서 준비된 것이었다. 이는 비단 오상준의 『초등교서』만이 아니라 이보다 앞선 의암의 『삼전론』이나 『준비시대』에서도 나타났고, 대다수 애국자강운동가들과의 결합 속에서 만들어진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을 통해 꾸준히 자주독립의 의식을 고취시켜 갔던 것이다.

신국가수립운동에서 제기되었던 핵심적인 과제는 민권운동과 자주독립운동이었고, 민권은 하늘이 부여한 正理로서 민권은 곧 국권이였다. 기미독립선언으로 이천만 겨레가 합심·단결하여 자주와 국가독립의 자유권을 선포함은 곧 신국가수립의 순간이였다. 이는 ‘천연적으로 부여된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자손만대에 영유(永有)케 하고,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함’이며 ‘이천만(二千萬)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여 이를 포명(佈明)함’이였다. 천연의 정권을 누림은 하늘(天)의 명명(明命)이며, 전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기에 천하 어느 무엇도 이를 저지억제(沮止抑制)치 못할 것이였다.

요컨대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함은 하늘이 부여한 자유권, 즉 조선인의 민권과 조선의 독립을 정당한 권리로 선언함이었고 민권의 향유와 조선독립은 곧 정의와 인도로서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것이였다. 3·1운동은 2천만 동포가 합심·합의를 이루었던 공화정치의 출발이였고, 동포애와 인류애를 포방하는 세계

51) 오상준, 앞의 책, 38쪽.

52) 같은 책.

공동체의 국가지향을 드러낸 사해동포주의였다.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유권을 찾는 것은 곧 동양평화(東洋平和)이자 세계평화(世界平和)로 나아가는 인류행복(人類幸福)의 필수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립선언서 말미에는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自由權)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자유로운 삶의 낙(樂)을 만끽”하라 하였다. 자유권은 하늘과 부합하는 “인간의 타고난 천성”으로서 “양심(良心)이 아(我)와 동존(同存)하며 진리(眞理)가 아(我)와 병진(并進)”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유권은 공명정대한 천의(天意)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합심의 공화정치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V. 3·1운동에서의 공화와 평화

영어에서 공화(public)는 라틴어 *populus*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인민’을 의미한다. 그러나 3·1운동에 나타난 공화는 합심과 인화의 합의를 뜻한다. 다시 말해 인화의 합심은 하늘이 부여한 천연적 천성과 부합함에서 오는 것이고, 천성의 우주 근원은 모든 인간에 보편적으로 통화(通化)되는 것이기에 합의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 합심의 인화(人和)는 곧 공화(共和)로서 세계평화의 조건이 된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국민전체의 합심과 합의”를 통해 생겨난 것이고, 이는 개인의 다양성을 손상시키거나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굳건한 자유권의 성장 속에서만 국가도 성장할 수 있는 정권(正權)의 공화국이다.

이 공화국은 국민수지에서 말한 “중민(衆民)의 합성체(合成體)요, 주권은 중민의 합성력(合成力)”이라 한 것과 맥이 닿아 있고, 나진·김상연이 말한 “전 인류로써 성립한 유기체요, 전 세계의 토지를 함유하며, 전 인류의性情을 기초로 하는”⁵³⁾ 인류동포주의였다. 또한 안중화가 말했듯이 “나라의 인민이 합하여 일체를 이루고(合成一體) 스스로 그 이치를 판단하며 스스로 그 뜻을 마땅히 하고, 스스로 그 정치를 행하는 것”⁵⁴⁾이었다. 서구 근대국가가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법치국가와 사회복지라는 해결책을 시도해 왔지만 한국처럼 자유·공화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내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었다. 서구의 유기체적 국가는 위계적 질서를 확고히 하고 있고 인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하며 전체주의로 나아갈 뿐 다양

53) 나진·김상연 역술, 『국가학』, 1906, 15-16쪽.

54) 伯倫知理著, 안중화 역, 『國家學綱領(1907)』, 이 책은 양계초(1880-1932)가 번역한 것을 안중화가 다시 우리말로 한자를 섞어서 번역한 것이다.

성의 결합을 통한 전체성의 형성을 이룩해 본 경험이 없다. 물론 개인과 국가가 서로 한 몸이기에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지가 합일된다고 보는 것이지만 한국의 공화처럼 인간 내면을 관통하는 천성의 심정(心情)에 근간을 두는 것은 아니다. 3·1운동에서 지향했던 독립국가 역시 인류의 성정을 기초로 한 인간 자유권에 그 근거를 둔 것이었고 인류의 평화를 지향했다. 이는 자유권과 공화의 근거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것이고, 자유권은 인민과 국가의 통섭을 이루는 것이기에 동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동포에는 애국심을 생겨나게 하고 인류에는 세계평화를 가져온다.

천도교의 공화는 일찍이 손병희에게서 주장되었고(1903), 정계완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에 기반한 천인공화의 시대”를 말하면서 정치에서도 만인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⁵⁾ 오문환은 천도교 공화를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 안에 하늘의 보편성을 안고 있다는 자각이 정치적으로 확장된 것”⁵⁶⁾으로 말했다. 특히 오상준은 천인에 바탕한 국가유기체를 제시하여 자유권과 국가독립을 삼단(三團)의 사상으로 구체화하였다. 우리 각자의 자연권 안에는 ‘나 한 개인’과 ‘우리 정신’이 있고 ‘우리 국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신은 천단(天團)이요, 우리나라는 지단(地團)이요, 우리 자신은 인단(人團)이다. 이 삼단(三團)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골육이 서로 붙어 있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와 정신이 사람 성품 가운데 심어진 까닭에 각 개인은 정신을 단결하여 국가의 한 유기체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이 곧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의 지각과 학문이 유치할 때에는 우리나라 또한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정도와 위치가 건장할 때에는 우리 또한 건장하다. ... 우리와 우리나라가 붙어 있음이 우리 몸의 뼈와 살이 붙어 있음과 같아 살아도 분리할 수 없고, 죽어서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 우리의 정신에서 자신과 자국이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⁵⁷⁾

하늘의 우리 정신과 하늘의 국가적 성질이 사람의 성품에 심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국권 회복이 자기 성품의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유권의 회복이 곧 국권회복에 있으므로

55) 정계완, 「삼신설」, 『천도교회월보』 9, 1911.4, 23쪽.

56) 오문환, 「천도교(동학)의 민주공화주의 사상과 운동」, 『정신문화연구』3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43쪽.

57) 오상준, 초등교서, 앞의 책, 59쪽.

애국심은 당연한 요청이 된다. 따라서 이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나라 독립을 위해 펼쳐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애국의 당위성을 설정하는 것이고, 국가와 개인을 유기체적으로 연결시킴은 서로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인식을 낳게 된다.⁵⁸⁾ 그러므로 자유권은 수동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와 우리나라를 자기 안에서 일체화하는 천연성의 성품을 자각한 천인(天人)의 천격(天格)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전체합의를 이끌어내는 공화정치도 여기서 비롯된다. 천격(天格)이란 하늘을 체받아 천도를 행하는 천인(天人)에서 이루어진다.⁵⁹⁾ 이를 이병한은 천인공화국가라 명명한다.

초등교서에서 모색하는 공화국은 천인(天人) 정신에 입각한 합의체입니다. 천인의 마음을 통한 사회의 영성화를 지향합니다. 천인은 요즘말로 ‘호모 데우스’라 고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모 데우스의 집합의지와 집합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공화국, 지상의 천국을 염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이 아니라 ‘천권’(天權)이라 명명했음이 눈을 찌릅니다. 응당 천부인 권과도 발상이 다릅니다. 인권은 그저 신으로부터 소여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과 하나로 합일된 사람, 그 천격(天格)을 이룬 천인으로서 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부단한 인성 도야로 천성(天性)을 발현할 것을 당부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화국 인민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응당 인격을 천격에 부합하도록 부단하게 수양하고 수행하고 수련해야 합니다. 인격을 끊임없이 고양하는 근본적인 정치운동이자 근원적인 영성운동이었던 것입니다. ... 저는 이 천인공화국의 발상에 앞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할 다종다양한 ‘제도 개혁’의 단서 또한 무궁무진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⁶⁰⁾

3·1정신은 천인의 자유권, 공화, 인류애에 있다. 인류가 단결하여 한 단체를 이루고 능히 정치사회를 만드는 것은 인류의 천성으로써 국가에 천연적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인류의 천성으로써 국가의 기초를 삼는다는 것은 인류의 흉중(가슴)에 일치를 구하는 心念이 있고 이 심념에 의하여 국가의 외형이 생겨나와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다.

58) 오상준, 앞의 책, 60-61쪽.

59) 오상준, 위의 책, 84쪽.

60) 이병한, 「3·1절은 개혁절이다」, 『다른백년』, 2019.3.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에 대한 연구

도현섭 (선학유피대학원대)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독립선언서에 내재된 독립정신
- III.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
- IV.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선양
- V. 마치며

I. 들어가며

주지하는 대로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로서 대한민국은 금년을 통일을 약속하는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자 국민주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때이자, 한반도의 통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갖추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민족의 역사이자 국민주권의 자유와 평등 나아가 평화를 태동시킨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3·1운동은 자주, 자유, 평등, 평화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를 통해 나타나는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여져 그 후 대한민국 정부에 계승 발전되어 현재에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3·1운동을 통해 꽃피워진 독립정신을 계승하려는 취지로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3·1운동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운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부에는 모든 인간이 공감하고 호응하는 보편적인 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류가 보편적인 가치로 여기는 자유와 평등, 자주, 평화, 새로운 비전 등이 내재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지향하고 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 즉 이상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보편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¹⁾의 구가(救家)·구국(救國)·구세(救世)를 향한 여정은 100년 전 3·1운동을 통해 드러난 독립정신과 맥락²⁾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3·1운동에서 자유와 평등 아래 모든 사람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대한민국의 정치 이념을 찾듯이 가정연합 또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 아래 상대를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독립정신과 가정연합이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는 이유는 가정연합의 창시자인 문선명의 삶과도 연관성이 깊다.

종조부인 문윤국 목사의 독립운동³⁾은 창시자의 성장기에 자연스럽게 영향⁴⁾을 주었을 것이며, 이후 일본 유학 시절에 도쿄에서 지하 독립운동⁵⁾을 전개하였을 때에 독립정신이 삶 속에 투영되어 3·1운동과 함께 태동된 자유, 평등, 동양과 세계의 평화, 대한민국의 독립과 안녕, 자주,

1) 이하 '가정연합'으로 약칭.

2) "우리 운동은 지구성에 있는 모든 인류의 가정을 구하고, 모든 민족과 국가를 구하고, 나아가 이 세계를 구하는 구가(救家)·구국(救國)·구세(救世)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편, 『평화경』(서울: 성화출판사, 2013), 1039.

3) "평안북도 정주(定州) 사람으로 기독교(基督教)인이다. 1919년 3월 7일 선천군(宣川郡) 아이포(阿耳浦) 일대와 정주 오산중학교(五山中學校) 민세시위를 주동하였다. 3월 7일 선천군 아이포면사무소 뒷산에 모인 4천여 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해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출옥 후에는 자신의 토지를 처분한 돈 7만원을 만주(滿洲)에 살고 있는 김숙제(金肅濟) 목사를 통하여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으로 조달하는 등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3권(서울: 국가보훈처, 1987).

"피고 문윤국 상고 취지는 '본인이 정주군 아이포면(阿耳浦面) 면사무소 뒷산 위에 있는 수천인의 회중 중에 가서 조선독립을 선언한 것은 정의와 인도로서 독립할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조선민족의 독립을 표명할 뿐으로 결코 소란 또는 파괴적 행동은 추호도 없었는데, 이번 지방법원 및 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억울하므로 상고한다.' 삼일운동 재판기록(판결 대정 8년 형상 제177호)

4) "일본인들은 하루 빨리 보따리를 싸서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조상의 유업이다! (중략) 윤국 할아버지의 혼을 이어받아 감히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해낸 것입니다."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파주: 김영사, 2009), 56.

5) "한인 유학생회 신입생 환영회에서 나는 조국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뜨거운 민족애를 과시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입회한 자리였음에도 당당하게 불러 짓었습니다. (중략) 일본 천황 히로히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두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조직에서 도감 책임자가 되어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긴밀한 위치에서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차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였지만 정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일이라는 생각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81; 창시자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이데 도시히로, 「문선명 선생의 일본유학시절 항일운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2010).

인류의 행복과 문화⁶⁾에의 공헌 등의 사상이 창시자의 생애와 사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이다.⁷⁾ 그 직접적인 경험에서 구체적인 이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가정연합의 활동에 자양분이 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제에 독립정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가정연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독립정신을 계승 및 선양하는 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먼저 독립운동의 주요한 사상들이 함축되어 있는 독립선언서를 중심으로 독립정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당시에 이루어졌던 독립운동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독립운동의 이념과 당위,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당시의 독립정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 편의 독립선언서 - 대한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 를 통해서 독립정신을 조명할 것이며, 이를 가정연합이 어떻게 계승하고 선양하였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가정연합이 이론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사회와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하는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II. 독립선언서에 내재된 독립정신

1910년 조선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전개된 독립운동의 이념과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자료는 수없이 발표된 각종 독립선언서라 할 수 있다.

- 6) 창시자는 세계평화와 인류 문화 창달을 구현하기 위해 유니버설 발레단 및 리틀엔젤스 예술단 등을 창설하여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니버설 발레 아카데미 개교 축사에 그 목적과 방향성이 설명되어 있다. “창조하는 과정은 인간에게 깊고 심오한 경험을 갖다 줍니다. 참사랑과 참예술은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영화롭게 하려는 염원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우리는 천부의 예술적 소질을 활용하여 참사랑과 지상의 영원한 평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숭고한 인간으로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사랑의 구현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달래 드리고 새 예술 세계의 창조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편 『평화경』, 1034.
- 7) “본인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약소민족의 비극과 고통,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전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으로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처참한 상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살육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느낀 그 슬픔과 고통은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편 『평화경』, 1036; “(윤국) 할아버지는 ‘죽어도 나라를 위해 죽으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31.

독립선언서는 각 선언서의 발표 주체가 제시하고자 하였던 투쟁의 방법과 목표, 이념적 근거 등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들의 사상적 모토가 바로 독립정신이다.⁸⁾ 따라서 독립선언서의 독립이념과 그 정신은 독립운동사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타 시기에 비해 유독 많은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1919년은 독립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자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시기다. 1910년부터 전개된 독립운동이 분수령을 맞아 결실을 맺은 시기이며 이 결실로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진행된 독립운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1919년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에서 당시의 민중들이 염원하였던 독립정신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핵심 내용은 전근대적이며 봉건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현대성을 지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1919년에 발표된 세 편의 주요 선언서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독립정신의 함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시기 순으로 무오독립선언서라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서⁹⁾와 2·8독립선언서¹⁰⁾, 그리고 3·1독립선언서를 정리하고자 한다.

1.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 또는 무오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1일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로 국한문혼용체, 35행 1723자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약소국의 독립운동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리라는 정세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의한 자주독립을 성취시키려는 목적¹¹⁾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1919년 2월 1일 만주 지린에서 만주와 연해주 및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들 39명의 명의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때가 음력으로 기미년 1919년 1월 1일인데, 선언서의 작성과

8) 1910년 한일병합 때부터 1945년 광복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103개로, 시기별로 구분하면 1910년대 61개, 1920년대 23개, 1930년 2개, 1940년대 17개의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1919년 1년 동안 57개의 선언서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소진 「1910년대 독립선언서 연구」(박사 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9)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동환 「戊午獨立宣言의 歷史的 意義」, 『국학연구』 제2집 (1988): 155-183;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제-발표시기의 규명과 내용 분석」, 『역사비평』 여름호 (1988): 144-178; 조항래 「抗日獨立運動史에서의 大韓獨立宣言書의 位相」, 『白山朴成壽教授回甲紀念論叢』 여름호 (1991): 293-305.

10)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세현 「2·8학생운동에 대하여」, 『숙대사론』 제4집 (1969): 37-71; 김성식 「2·8독립선언서의 정신」, 『일제하 한국학생 독립운동사』 (서울: 정음문고, 1974), 37-71; 김성식 「한국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 『한국근대사론』 Ⅲ (서울: 지식산업사, 1977), 18-19.

11) 조항래 「抗日獨立運動史에서의 大韓獨立宣言書의 位相」, 『白山朴成壽教授回甲紀念論叢』 여름호 (1991): 48.

서명이 그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고, 기미독립선언과 구별하기 위해 ‘무오독립선언’으로 불린 것이라 여겨진다. ‘무오독립선언서’가 실제로 발표 및 배포된 것은 1919년 월 3·1운동 직후 알려져 있다. 이 선언에 참여한 주체로 모두 39명의 이름이 선언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직후 국제정세의 변동을 포착하여 독립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가장 앞선 것이다.

대한독립선언서에 내재된 유의미한 독립정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한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강조하였다¹²⁾. 둘째, 한민족이 지향하는 독립은 자주독립과 평등복리의 실현을 통한 민족국가 수립에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선언문에는 자주독립, 평등복리, 자주선포 등의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추후 전개된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다.¹³⁾ 마지막으로 독립 이후에 건설될 국가의 이념으로서 평등과 평화를 주창하며 모든 동포들이 동등한 권리와 부를 베풀어 남녀와 빈부의 격차를 차를 고르게 하여 모두가 균일하게 평등사상에 근거한 자주독립을 쟁취하자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독립선언서의 기저에 흐르는 몇 가지 합의된 평등, 자주, 평화, 독립, 균등, 자유 등의 개념은 이후 일본 동경 유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2·8독립선언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3·1운동에도 기본개념으로 도입되어 이념적인 맥락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2. 2·8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운동은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유학생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최초의 학생 독립운동으로서 3·1독립운동을 촉발시킨 선구적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이 계기가 되어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 실천적인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하게 되었다.¹⁴⁾ 이후 조선청년독립단의 명의로 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이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파리, 상해 등의 언론사에 보내 기사화¹⁵⁾를 시도하였다. 국문으로

12) “我 大韓은 無始以來로 我 大韓의 韓이요 異族의 韓이 아니라 半萬年史의 內治 外交는 韓王韓帝의 固有權이요 百萬方里의 高山麗水는 韓男韓女의 共有産이요 氣骨文言이 歐亞에 拔粹한 我 民族은 能히 自國을 擁護하며 萬邦을 和協하여 世界에 共進할 天民이라 韓一部의 權이라도 異族에 讓할 義가 無하고 韓一尺의 土라도 異族이 占할 權이 無하며 韓一個의 民이라도 異族이 干涉할 條件이 無하며 我 韓은 완전한 韓人의 韓이라”

13) “我 大韓同族 남매와 온 世界 友邦同胞여 我 大韓은 완전한 自主獨立과 우리들 신성한 平等福利를 我 子孫黎民에게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異族專制의 虐待와 壓迫을 벗어나서 大韓民主의 自主를 宣布하노라”

14) 김성식, 「한국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 『한국근대사론』 III, 18-19.

된 선언서는 송계백에 의해 국내에 반입되어 최남선, 송진우, 최린 등이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참고로 삼았다.

한편,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은 오전 10시경 독립선언서 및 결의문과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및 공사관, 일본 정부의 각 대신, 일본 양원의원, 조선총독부 및 각 신문사, 잡지와 여러 학자들에게 우송하였다. 오후 2시경 약 400명의 남녀 학생들이 YMCA회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¹⁶⁾ 이 사건은 일본을 비롯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도되어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으며 해외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리고 미주 등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을 하나로 모으는 도화선이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벌어진 3·1운동에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독립선언 발표와 독립운동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독립선언서의 서두를 보면 선언서의 목적과 취지 등이 잘 드러나 있어 그 핵심사상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서두는 다음과 같이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이전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得)한 세계 만국의 앞에 독립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어 독립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정의와 자유를 얻은 세계 각국에 호소하고 있다. 이는 국제 정세에 밝은 유학생들이 독립에 대한 현실적 접근으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선언된 것으로 보이며 ‘정의와 자유’라는 두 기초 위에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독립투쟁을 벌인다면 동양평화를 해치는 화근이 될 것¹⁷⁾이므로 한국의 독립은 동양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즉, 정의와 자유에 기초한 한국의 독립은 동양의 평화와 직결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독립은 동양의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¹⁸⁾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2·8독립선언서에 내재된 독립정신은 기본적으로 대한독립선언서에서 주창하는 독립, 자주, 자유, 평화 등의 정신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문화에 공헌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5) *North China Daily News*의 평론란에 ‘청년조선의 열망(Young Korea's Ambition)’이라는 제목으로 2·8독립운동의 내용이 처음 소개되었다.

16) 김성식, 『한국 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 『한국근대사론』 Ⅲ, 25.

17) “그러할진대 韓國을 合併한 最大理由가 消滅하였슬 뿐더러 從此로 朝鮮民族이 無數한 革命亂을 起한다 하면 日本에게 合併된 韓國은 反하여 東洋平和를 擾亂케하는 禍源이 될지라.”

18) “吾族은 久遠히 高等한 文化를 有하였고 半萬年間 國家生活의 經驗을 有한 者라. 비록 多年 專制政治의 害毒과 境遇의 不幸이 吾族의 今日를 致하였다 하더라도 正義와 自由를 基礎로 한 民主主義의 上에 先進國의 範을 隨하여 新國家를 建設한 後에는 建國以來 文化와 正義와 平和를 愛護하는 吾族은 반드시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文化에 貢獻함이 有할지라.”

3. 3·1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의 지도이념을 표출하고 독립의 절실한 필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함으로써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도화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며,¹⁹⁾ 대한독립선언서와 2·8독립선언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양자는 선구(先驅)와 후신(後身)의 입장에서 비교되고 있다. 오히려 3·1독립선언서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2·8독립선언이 민족주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여 시종일관 반일을 위한 저항운동으로 비쳐져 무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는 주장²⁰⁾도 있으나,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국내에서의 선언서와 3·1운동에 이은 만주에서의 포고문은 비폭력주의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이 무렵 국외에서 발표된 여러 건의 선언서들은 ‘영구한 혈전(血戰)’, ‘육탄혈전(肉彈血戰)’ 등 비장한 결의를 보이고 있으며 1919년 가을부터는 국내외 모두 폭력적인 무장투쟁의 운동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¹⁾ 이렇듯, 국내외에서 발표된 다른 선언서의 비장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3·1독립선언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비폭력주의를 강조하면서 폭력적인 투쟁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구상할 단계에서부터 평화로운 만세 시위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평화만세시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방안까지도 가지고 있었다.²²⁾ 이러한 평화적 만세운동은 서울 파고다공원을 기점으로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으로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에 일본은 폭력적이고 철저한 탄압을 가하게 되었으며 화성 제암리를 비롯해 평남 성천, 황해도 수안, 평남 사천 등지에서 학살이 자행되었다.²³⁾

이상과 같이 대한독립선언서와 2·8독립선언서 그리고 3·1독립선언서는 조금씩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독립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민주적 정치 이념과 아울러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

19) 강재연, 「사상사의 입장에서 본 3·1운동」, 『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서울: 백산서당, 1983), 24.

20) 조항래, 「3·1독립선언서의 이념적 배경」, 『산문사학』 제5집 (1991): 12-15.

21) 김소진, 『1910년대 독립선언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00-102.

22) 3·1독립선언서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의 문구를 근거로 3·1운동이 무장투쟁운동으로 인식하는 학자도 있으나 이 의미는 폭력의 행사를 외치는 투쟁적인 구호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독립의 순간까지 최선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맹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소진, 『1910년대 독립선언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05.

23)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만세시위에 동참한 인원은 200여 만 명이며, 이 들 중 일제에 의해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47,00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울: 서해문집, 2004), 139;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서울: 경세원, 2002)

평화를 지향해 갔던 점에서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 이들 선언서는 주권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운동의 논리와 새롭게 건설할 독립국가의 이념과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그 곳에는 한민족의 자주는 물론 인류 평등의 주장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표방²⁴⁾하고 있으며 선언서에 내재된 중요한 합의된 개념들, 즉 독립정신이라 할 수 있는 평등, 자주, 독립, 세계평화 나아가 인류 문화에 공헌하는 새로운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스며들어 이후 해방 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헌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독립정신에 나타난 주요한 사상들은 인류 한 형제, 세계일가(世界一家)의 화합시대를 향한 다방면의 평화 활동을 전개하는 가정연합의 사상과 충분히 견주어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민족의 자주성, 세계평화 등의 비전을 담고 있는 독립정신은 가정연합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치들로,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향한 가정연합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Ⅲ.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

3·1운동은 한국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5.4운동과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운동 그리고 아랍의 일부 지역 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 근간에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상호 간에 존중해주며,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즉, 인류가 보편적인 가치로 여기는 자유, 평등, 평화 등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이상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은 국가, 사상, 민족 등의 한정된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보편타당한 가치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연합의 구국·구세운동은 100년 전에 외쳤던 독립선언서의 독립정신과 그 결을 일정 부분 같이 한다.

본고에서는 가정연합이 지향하는 이상세계 즉 국가상, 세계상 등이 독립선언서에 내재된 국가상, 세계상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3·1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정신적, 물질적 토양과 창시자가 경험했던 당시의 환경적, 사회적 토양과 일치된 공통의 토양에서 공유된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24) 장석흥, 「한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의 계승」, 『한국학논총』 45집 (2016), 239.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창시자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역사의식²⁵⁾과 한민족에 대해 취하는 특별한 입장²⁶⁾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이상과 독립선언서를 통해 의미지는 독립정신이 맞닿아 있는 지점을 살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독립선언서에 내포된 다음 두 가지의 독립정신, 평화와 평등(균등)을 가지고 가정연합이 독립정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평화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한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간절히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한민족에게 평화사상은 주권 국가들 간의 ‘전쟁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의 개념을 넘어서 주권 없는 식민지의 민족생존과 독립을 위해 인간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반대하는 적극적 평화와 인권으로서의 평화권 개념까지 확장하여 이해하였다.²⁷⁾ 이러한 인식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사상적 근간을 이루게 되었으며 독립선언서에 동양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는 한민족의 독립 내지 인류의 행복과 결부시켜 평화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5) “20세기에 있어 천적인 섭리에 의해서 한국이 택함받은 곳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강대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강대국들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중략) 그렇지만 하늘이 이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강토 위에서 이 민족을 통해 세계사적인 새 문명의 기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천륜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은 온갖 수난과 비운 속에서 이 민족을 보호하셨던 것이며 (중략)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 역사와 새 문명권을 탄생시킬 하늘의 내밀(內密)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 (서울: 성화사, 1988), 129.

26) “한국이 단일민족으로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온 것은 충신열사들의 거룩한 정신이 계승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충효열의 사상은 동서문화권을 하나로 묶는데 절대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있어서 세계 어떤 나라 앞에도 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민족에게는 세계를 위한 평화의 공신이 되기를 바라고, 하늘땅이 침략자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방해 가지고 하나의 사랑의 천국을 건설하기를 바라는 민족성이 있다.”, “(한)민족이 최후에 세계 인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 (서울: 성화사, 1988), 180-199; “한국어는 바로 조국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이 조국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온 인류는 한 나라 말을 사용하는 한 민족이 되어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13), 568.

27) ‘평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제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 후 유럽에서 평화의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고 국가 간의 영속적 평화로서의 영구평화를 이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는 확장 심화되어 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학문, 즉 평화학 분야가 진전되면서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를 넘어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적 조건 또는 차별과 억압이 없는 이상적 상태라는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평화 연구는 평화가 강대국의 국제법적인 조약, 안보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세계시민주의에 의한 식민지 약소민족의 자결권과 해방의 문제를 다루는 역사가 포함되었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문화와 사상, 인권으로서 평화권에 대한 것까지 확장되었다.’ 이지원, 「3·1운동기의 평화사상」, 『정신문화연구』 통권 153권 (2018): 42-113.

가정연합은 이상적인 세계에 대하여 자유·평화·통일·행복 등 인간이 누려야 보편적 가치가 실현된 세계임을 밝히며,²⁸⁾ 이를 이룩하기 위한 운동을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는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살아온 창시자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평화가 가정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등 모든 조직 앞에 세계평화라는 이름을 내 걸 정도로 개인의 평화에서부터 세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하는 삶을 살았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 평화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평화의 가치를 삶의 경험 속에서 체득하고 확신하였다.

창시자는 평화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평화는 상대적인 말로,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상하관계, 좌우관계, 전부가 화해가지고 모든 것이 기울어지지 않고 원만해 지는 것”²⁹⁾을 말하며 이러한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면 “답이 없이 모든 것이 구김살 하나 없이 평평한 상태”³⁰⁾가 된다. 결국 “평화를 이루었다는 말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가 하나 되었다”³¹⁾는 말을 의미한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관계’³²⁾일 때만이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를 위하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³³⁾ 창시자는 평화에 대해 이와 같이 바라보았으며 타인, 타국, 타 문화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 테러나 국가 간의 분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평생을 평화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바람은 세상을 겹겹이 에워싼 담장과 울타리를 깨끗이 헐어버리고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의 담장을 허물고,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서 부자와 빈자의 틈을 메운 뒤 태초에 하나님

28)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집약된 「가정명세」의 이상세계에 대한 개념에서 잘 드러나 있다. 참부모님 말씀편찬위원회 편, 『천성경』(서울: 성화출판사, 2013), 1348-1350.

29)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86권(서울: 성화사, 1986), 98.

30)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09권(서울: 성화사, 1986), 276.

31)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82권(서울: 성화사, 1986), 232.

32)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를 중심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좌우라는 관념에서 이 둘이 하나의 수량을 이루어야 평등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 자체는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66권(서울: 성화사, 1986), 37; “평화하게 되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나? 평화는 혼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떠난 세계는 평화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75권(서울: 성화사, 1991), 196.

33) “상대방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원칙만 들고 나가게 되면, 가정에서의 평화의 가정, 자유의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사회에서도 평화의 사회, 자유의 사회, 행복한 사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국가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곳든지 이 원칙을 중심삼고서는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깃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은 당연하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70권(서울: 성화사, 1986), 307.

지으셨던 평화로운 세상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는 세상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사랑이 부족한 세상을 치유하려면 우리는 다시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인류의 아름다운 본성을 회복하는 길은 어린 시절 아버지 등에 업혀서 배운 평화의 원리와 사랑의 숨결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³⁴⁾

2. 평등과 균등

세 편의 독립선언서에는 평등, 등(等), 균(均), 동(同) 등의 유사한 맥락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공유산’(公有產)과 ‘평등’, 2·8독립선언서의 ‘동권동부’(同權同富)와 ‘등현등수’(等賢等壽), 3·1독립선언서의 ‘인류 대의의 평등’ 등의 표현은 당시의 한민족의 염원과 희망이 담긴 언어로,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권리와 부를 베풀어 남녀와 빈부의 격차를 고르게 하여 모두가 균일하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의 가치가 실현된 새로운 국가상을 이념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소앙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광복운동과 독립 이후의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운동을 동시에 병행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그 이상과 방법론으로 삼균주의를 정립했던 것이다.³⁵⁾ 삼균주의는 각기 세 가지 관점에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개인, 민족, 국가의 균등으로, 일제 강점기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공식적인 강령으로 기능했으며 좌우익으로 분열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대동단결시키기 위해 정립된 사상이다.³⁶⁾

독립선언서에 제시된 평등의 추상적인 개념에 맞닿아 있는 내용으로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이상인 공생공영공의주의(共生共榮共義主義)³⁷⁾를 들 수 있다. 공생공영공의는 각각 경제, 정치, 윤리의 범주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이상을

34)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19.

35) “形式上 政治獨立에만 沈醉하던 盲目的 運動은 이미 過去에 屬한 運動이다. 우리는 獨立의 形式 속에 革命의 本質을 內包하며, 革命의 形式 속에 民主의 均等을 내포하며, 民主의 形式 위에 科學的으로 具體化한 實際施設 으로써 政治 經濟 教育의 富益을 人民 各個人에 均等하게 享受하도록 強烈하게 主張하며 力行하는 中이다.” 이은상, 『素昂先生文集(上)』 (서울: 삼균학회, 1979) 278; 이상익, 「조소앙 삼균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이념적 성격」, 『한국 철학논집』 30집 (2010), 89.

36) 조소앙이 균등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균등의 용어 해석 등에 대해서는 관련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다음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강정인 권도혁,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한국정치학회보』 52-1집 (2018), 257-276.

37) 공생공영공의는 이상사회의 경제, 정치, 윤리 사상으로서, 가정연합이 상정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인 천일국(天一國)의 기본이념이 된다. 공생공영공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두익사상)』, 751-773 참조; 천일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편, 『천성경』, 1286-1292.

나타낸 것으로 이념적 토대가 되며 기준점의 역할을 한다. 창시자는 공생공영공의주의에 대해 “하나님주의를 경제, 정치, 윤리의 측면에서 다른 개념으로서 공생주의와 공영주의와 공의주의의 세 가지의 단순개념으로 이루어진 복합개념”³⁸⁾이라고 밝히면서 공생은 소유에 대한 경제적 측면, 공영은 자본주의의 정치이념인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정치적 측면, 공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동의 윤리적 측면에서 이상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공생주의³⁹⁾는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특히 소유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며, 소유는 크게 공동소유와 적정소유로 대별된다. 공동소유는 부모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자녀인 인간들이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창조의 질서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나, 전체와 나, 이웃과 내가 만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이며, 적정소유는 양심이 허락하는 만큼의 적정량을 가질 수 있다는 개인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이상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공영주의는 자본주의의 정치이념인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사회의 정치의 특성을 다룬 개념”로 만인이 다함께 참여하는 정치” 추구하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대의정치를 언급하고 있다. 공생주의가 공산주의의 국가 소유 및 사적 소유철폐에 대한으로서 제시된 것이라면 공영주의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그 역할이 정의되고 있다.

공의주의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공동의 동일한 윤리관을 지니고 사는, 공동윤리사회의 실현에 관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 근간에는 가치관의 붕괴와 인륜 도덕의 혼돈의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공동의 윤리관과 공공선을 설정해야 된다는 사상이다.

이상으로 볼 때, 공생공영공의주의는 더불어, 함께, 다 같이 등의 공(共)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독립선언서에서 제시된 ‘평등’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독립선언서의 평등은 해석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념 정립의 여지가 있다. 가정연합에서는 공생공영공의주의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 활동은 가정연합이 독립정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이념을 선양시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두익사상)』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3), 75f.

39) 『원리강론』에는 공생의 경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보면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본연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간의 부모가 그 자식을 대하듯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환경과 평등한 생활 조건을 주시려 하는 것이다. (중략) 생산과잉에 의한 판로경쟁이나 편파적인 분배로 인하여 전체적인 생활목적에 지장을 가져오는 축적이나 소비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생산과 공평하고도 과부족 없는 분배와 전체적인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47f.

IV.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선양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인간상, 사회상, 국가상, 세계상이 독립선언서에 내재된 독립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바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연합은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며 ‘지금 여기’에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정신을 기리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세계일보와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이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 안중근’을 1년 여간 특집연재⁴⁰⁾하면서 민족정기의 발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안중근 의사가 주창한 동양평화론이 한국의 평화 나아가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과 분쟁을 원인을 제거하여 동양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초국가적인 세계평화를 모색하자는 데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 있다. 유관순 열사 또한 평화의 상징으로서, 창시자는 유관순 열사를 역사적으로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과 일본을 연결 짓는 평화의 구심점에 세워 조만간 다가올 남북통일을 대비할 목적으로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을 유관순 열사의 평화사상으로 묶고자 하였다.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가정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운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계승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려 세계평화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관순 열사정신선양회’에 대해 조명한다.

1.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이사장 홍일식)은 1993년 11월 10일에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 1992년 세계일보사가 민족정기 발양의 일환으로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특집으로 보도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여순 순국 유적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범국민성금 모금

40) 1992년 10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총 153회에 걸쳐 ‘대한민국 안중근’을 연재하였다.

운동을 전개하여 조성된 약 20억 원의 기금을 기본 자산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재단의 설립 목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과 평화사상을 계승 및 선양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가 숨진 여순 감옥 주변의 공동묘지 성역화 및 관련 유물 유적 등을 발굴하고 보존, 관리하는 사업과 제반 기념문화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혼이 살아 숨 쉬는 여순감옥과 일본 관동도독부 고등법원 등 중국 여순지역의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전시관을 설립하여 세계인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를 공표하는 데 있다.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순감옥 내의 안중근 의사 관련 역사적 유물과 사적 복원 및 각종 기념물 건립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순감옥 내 전시관을 설치하여 안중근 의사의 흉상을 제막하였으며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여순 소재의 일본관동도독부 고등법원의 원형 복원 및 기념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옛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을 매입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내외 자료수집, 발굴, 연구, 보존, 홍보 등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전시회 개최 그리고 출판물 발행 등을 꾸준히 전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 기념사업 준비자문기관 활동 및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재 재단의 중점사업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이 한계성에 부딪쳐 추모식, 학술대회 등에 국한되어 활동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차후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계승 선양하기 위해 대국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점차 확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주창한 동양평화론⁴¹⁾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3국의 주권존중과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국적 협력체제 구축, 경제통합, 집단안보 등 초국가적 초민족적 통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창시자가 주창하는 협력과

41) 동양평화를 위한 5대 구상은 다음과 같다. ① 위순을 중립지대로 하여 대한제국, 일본, 청나라 3국이 협력을 위한 국제적 기구를 만들 것 ② 3국이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사용할 것 ③ 3국이 연합군을 창설하여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설 것 ④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일본의 지도 하에 경제 개발에 힘쓸 것 ⑤ 3국이 황제가 로마 교황의 중재 아래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을 것 즉, 동양평화론은 동서양을 떠나 국가와 민족간의 전쟁과 분쟁을 원인을 제거하여 동양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초국가적인 세계평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4강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양평화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상웅, 『안중근평전』 (서울: 시대의 창, 2009).

통합의 초민족, 초국가적 평화이상세계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연결지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4대 강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새로운 담론을 제공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관순 열사 정신선양회

유관순 열사 정신선양회는 창시자의 뜻에 따라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1992년과 1995년에 설립 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려 일본인을 비롯한 민단과 조총련 소속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상호교류와 친목을 도모하여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남북충선 대비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⁴²⁾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유관순 열사 정신선양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은 민단과 조총련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52개 지역에서 약 6만 여명이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천주평화연합과 연대하여 총 89회의 대회를 하였다. 행사 종료 후에는 추모 가두행진을 벌여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내외적으로 알렸다. 더불어 2001년부터는 매년 서대문형무소에서 국내 거주 중인 일본인 회원들이 모여 ‘순국선열정신선양대회 및 한일합동위령제’를 개최하며 일본이 한국민족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민단과 조총련 회원 1만 여명이 파주 임진각에 모여 남북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대동의 장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제고하게 되었고 민간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일본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주 유관순 열사 사당을 청소하고 시설환경을 정비하는 활동 전개로 지역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유관순 열사가 주장한 보편적인 평화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주창하는 초국가적, 초민족적 평화이상세계를 향한 실천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상으로 가정연합은 독립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국가와 종교의 벽을 넘어 가정연합이 독립선언서에 내재된 독립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어떤

42) “유관순 사상을 중심삼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중략) 이것을 위해서는 민단과 조총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 일을 일본이 하게 되면 조총련 대표와 민단 대표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기운이 싹트는 것입니다.”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29권 (서울: 성화사, 1991), 314.

활동을 전개 나왔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위에서 서술된 일련의 활동들이 자유, 평화, 자주, 비폭력, 평등, 존중 등의 독립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였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인간상, 사회상, 국가상, 세계상의 실현을 위해 다방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 가정연합의 특징은 종교, 국가, 민족 등의 이데올로기가 만든 울타리를 뛰어 넘어 초종교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초민족적으로 세계 인류 앞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제시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실천적 담론이 유의미하며 독립정신과 맥락을 같이하는 데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V. 마치며

상술한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통해 구현되었던 한민족의 독립정신에 대하여 가정연합이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했으며, 이를 계승 및 선양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1운동을 전후로 하여 선언되었던 주요 독립선언서를 분석하여 당시의 민중들이 염원하였던 독립정신의 핵심사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가정연합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계승·선양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가정연합이 독립정신에 대한 이론적 담론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영역에까지 확장시켜 대한민국 사회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3·1운동 전후를 필두로 하여 태동된 다양한 가치 - 국민 주권의 자유, 평화, 평등, 자주독립 등 - 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세계인들과 함께 한반도의 현실과 역사를 공유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고 번영과 통일의 길,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일정 부분 같은 궤를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가정연합도 평화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창시자의 생애가 일제 강점기와 광복의 시공간을 거치면서 공동의 토양에서 공유된 경험이 가정연합의 핵심가치로 내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평화세계의 모습은 독립선언서에 내재된 독립정신과 그 지향점을 일정 부분은 같이 하고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100년 전 이땅을 살았던 한민족의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독립정신은 한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향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끌어내어 마침내 해방과 독립을 획득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와 같은 독립정신은 과거의 어느 한 시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가정연합이 독립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동시대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지닐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이상이 확립되고, 그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어 마침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정연합은 그러한 의미에서 한민족의 독립정신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에서 사회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하며 계승·선양하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운동이 더욱 의미를 지니고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가정연합이 독립선언서에 담긴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 그리고 한국의 안녕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대국민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그리고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독립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가정연합이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였듯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의 요청에 발맞추어 가정연합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재언. 『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서울: 백산서당, 1983.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3. 서울: 국가보훈처, 1987.
- 김상웅. 『안중근평전』. 서울: 시대의 창, 2009.
- 김성식. 『일제하 한국학생 독립운동사』. 서울: 정음문고, 1974.
- _____. 『한국근대사론』 III. 서울: 지식산업사, 1977.
-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파주: 김영사, 2009.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70권. 서울: 성화사, 1986.
- _____.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82권. 서울: 성화사, 1986.
- _____.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86권. 서울: 성화사, 1986.
- _____.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09권. 서울: 성화사, 1986.
- _____.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66권. 서울: 성화사, 1986.
- _____.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75권. 서울: 성화사, 1991.
- _____.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29권. 서울: 성화사, 1991.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 서울: 성화사, 1988.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삼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편.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_____. 『평화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울: 서해문집, 2004.
- 이은상. 『素昂先生文集』 上. 서울: 삼균학회, 1979.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두익사상)』.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3.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서울: 경세원, 2002.
- 강정인·권도혁.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한국정치학회보』 제52-1집 (2018): 257-276.
- 김동환. 「戊午獨立宣言의 歷史的 意義」 『국학연구』 제2집 (1988): 155-183.
-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제-발표시기의 규명과 내용 분석」. 『역사비평』 여름호 (1988): 144-178.

- 이상익, 「조소앙 삼균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이념적 성격」, 『한국철학논집』 제30집 (2010): 89.
- 이지원, 「3·1운동기의 평화사상」, 『정신문화연구』 통권 153권 (2018): 42-113.
- 장석흥, 「한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의 계승」, 『한국학논총』 45집 (2016): 239.
- 정세현, 「2·8학생운동에 대하여」, 『숙대사론』 제4집 (1969): 37-71.
- 조항래, 「3·1독립선언서의 이념적 배경」, 『산운사학』 제5집 (1991): 12-15.
- _____, 「抗日獨立運動史에서의 大韓獨立宣言書의 位相」, 『白山朴成壽教授回甲紀念論叢』
여름호 (1991): 293-305.
- 김소진, 「1910년대 독립선언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 이데 도시히로, 「문선명 선생의 일본유학시절 항일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심신학
대학원대학교, 2010.
- 삼일운동 재판기록(판결 대정 8년 형상 제177호).

토론

『3·1운동에서의 공화와 평화』에 대한 논평문

이재일 (선문대)

이 연구는 개화기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에서의 한국적 변용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3·1운동을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당시에 간행된 도서, 교재, 잡지, 회보, 월보, 신문 등에 실린 글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은 1900년대 신국가수립운동의 연장선에 있었고, 인민의 자유권과 국가의 독립이 세계평화와 직결됨을 주장하는 운동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그런데 연구자는 기존연구에서는 신국가수립운동과 3·1운동을 분리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드러낸다. 첫째로, 국가주의 프레임 문제를 제기한다. 즉, 기존의 연구는 블룬칠리의 유기체적 국가론을 수용하여 인민의 자율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는데, 연구자는 국가 유기체설의 수용은 자주독립국가 설립의 방편이었고 민권을 강조했으며 인민의 합의가 우선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입헌군주제로의 규정 문제를 제기한다. 당시의 입헌군주제를 국가주의의 연장이라고 비판하는 연구가 있으나, 연구자는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君民同治와 尙衆共和로 이해하면서, 이는 조선의 절대군주제를 변혁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1900년대 중반이후로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하였다고 분석한다.

연구자는 본론에서 신국가수립운동에서의 유기체적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블룬칠리의 국가학이 소개되었는데 국가를 국민(겨레)의 공동체로 이해했다고 보았고, 자연법과 자유권에 대해서는 민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을 하늘이 내린 권리/자연권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은 국가사상을 고취시켜나간 민권운동이자 공화운동으로서 3·1운동은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1900년대 애국가장운동은 민중국가수립을 지향하면서 종교운동(정신운동)으로 국가의식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신국가수립운동에서 핵심적 과제는 민권운동과 자주

독립운동이었다. 온 겨레가 합심하여 자주와 독립을 선포한 기미독립선언은 곧 신국가수립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민권의 향유와 조선의 독립은 곧 정의와 인도로서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3·1운동에 나타난 공화는 합심과 인화를 뜻한다. 공화국은 衆民의 합성체 곧, 전 인류로 구성되는 유기체요, 전 인류의 性情을 기초로 하는 인류동포주의였으며, 인민이 자유롭게 뜻을 합하여 이치에 맞게 하는 정치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유기체적 국가론은 한국의 공화처럼 인간 내면을 관통하는 천성의 心情에 근간을 두는 것이 아니었다. 3·1운동에서 지향한 국가란 인간의 심성에 기초한 자유에 근거를 두었고 인류의 평화를 지향했다. 3·1정신은 자유권, 공화, 인류애로 요약된다.

금년은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우리와 같은 학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3·1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축제를 열어, 100년 전에 일어났던 3·1운동의 실상과 가치를 살펴보고 그 현재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논평자 또한 이 논문을 읽으면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화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논평자는 연구자가 주장하는 이 핵심적 논지를 이해하고 동의한다. 이 논문을 대하는 독자도 연구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 연구자에게 3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서론에서 3·1운동은 천도교가 10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연구자는 당시에 간행된 도서, 교재, 잡지, 회보, 월보, 신문 등에서 근거를 찾아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화기에 잡지를 본 사람은 최상의 식자층이었을 것인데, 과연 이러한 문자매체의 영향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00만 조선인 중에 몇 %가 도서, 잡지, 회보, 월보, 신문 등을 읽고 시대상황을 파악하였을까요? 또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몇 %가 연구자가 이 논문에서 주제로 삼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셋째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100년 전의 과거를 거론하는 것은 과거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함이 첫째 목표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즉, 역사를 연구하는 둘째 목표는 과거의 이해에 그치기보다는 현재를 새롭게 보고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 일까요?

토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평문

나권수 (대진대)

도현섭 선생님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에 대한 연구”라는 글에 대한 논평을 준비하면서 3.1운동과 독립선언서에 내재한 자유, 자주, 평등, 평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에 계승되는 면모와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과 ‘유관순 열사 정신선양회’를 통해 실천적 영역으로 선양되는 구체적 양상을 공부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가 이론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단상을 반추해 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단한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들여 준비한 원고에 보다 완성도 있는 글이 되기를 바라는 독자의 마음으로 글을 읽으며 생긴 간략한 소견과 질문으로 촌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상태에서 논지 전개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억지로 논의하고자 몇 가지 내용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논평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필자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논문에서 발표자께서는 경술국치(1910)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전개된 독립운동의 이념과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자료로서 수없이 발표된 각종 독립선언서 가운데 ‘대한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그리고 ‘3.1독립선언서’를 채택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시기에 비해 유독 많은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1919년은 독립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자 독립정신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 발표된 독립선언서에는 “당시의 민중들이 염원하였던 독립정신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내재되어 있다.”고 그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는 시기별로 103종이나 있습니다(각주 5번). 이 독립선언서들은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정세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독립선언서에는 발표 주체가 제시하고자 하였던 목표가 투영되거나, 그 시기의 사회적 실상이 반영되어 시기별로 변화의 양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19년 독립정신 → 가정연합의 계승 → 1993년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 1992년/1995년 유관순 열사 정신선양회’로 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에 관한 논지를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독립선언서를 ‘1910년대 → 1920년대 → 1930년대 → 1940년대 → 1954년 가정연합 창시 → → 1993년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 1992년/1995년 유관순 열사 정신선양회 → 현재’ 등으로 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의 시간 간극을 메워주는 것도 논문 구성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발표자께서는 “3.1운동은 매우 한국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상호 간에 존중해주며,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 평등, 평화, 비전 등이 살아 숨 쉬는 이상세계를 지향하고 있다(3장).”고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연합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100년 전에 외쳤던 독립선언서의 독립정신과 그 결을 일정 부분 같이 한다.”고 상호 관계성을 밝히고 ‘평화’, ‘평등(균등)’으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가치인 “자유, 자주, 평등, 평화, 비전” 중 평화와 평등(균등)만을 가정연합의 독립정신 계승으로 주목하신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유’와 ‘자주’, 그리고 ‘비전’적 요소가 가정연합의 독립정신에 계승 발전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평화는 세계 ‘평화’ 통일가정연합의 최고의 가치이며 독립정신과 연맥되는 접점으로 문선명 선생에 의해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세계의 평화’ 등으로 평화의 개념을 확장 재생산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관점을 달리하면 모든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 및 사상과 대비되는 가정연합만의 독특한 평화관이 있다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종교현상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Homo Religious’라는 용어로 인간을 ‘종교적 인간’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현상을 반영하며, 강력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사회변동의 요인이면서, 동시에 사회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가정연합이 독립정신을 계승 선양하였다는 측면에서 소개하신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과 ‘유관순 열사 정신선양회’는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려 세계평화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 대개 종교적 교리로서 사회를 계도한다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종교적 입장에서가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 종교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혹은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독립정신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가정연합이 독립정신을 계승 선양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가정연합이 우리사회의 독립정신을 제고하게 한 측면이 있다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요청에 가정연합이 어떤 시대정신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5장)”이라고 하셨는데,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지만, 당대의 시대정신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되고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요청’과 ‘가정연합의 응답’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3·1 독립운동과 세계평화유산

제2분과_정치분과

■ 좌장 : 유호근(청주대)

▣ 서유석 | 북한연구소

김정은체제 '경제' '사회주의' 강조의 의미와 과제

▣ 이기완 | 창원대

한일관계의 갈등과 동아시아 평화

▣ 토론 : 이윤식(여의도연구원), 황수환(강원대)

김정은체제 '경제' '사회주의' 강조의 의미와 과제

서유석 (북한연구소)

목 차

1. 서 론
2. 2017년 '핵무력 완성' 선포와 평창동계올림픽
3. 2018년 상황의 전개
4. '경제' '사회주의' 병진노선?
5. 결 론

I. 서 론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정상회담 첫째 날까지만 해도 보다 급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빅딜', '미들딜', '스몰딜' 등 북미 간의 합의 성과에 대한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모든 예측을 빗나가고 합의는 결렬됐다. 하노이 회담을 조명하던 세계 모든 시선들은 의외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8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었고 그 결과에도 어느 정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북미 하노이회담의 결렬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반도 시계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북핵 폐기'라는 간단명료한 명제를 두고 그동안 무엇을 위해 수많은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고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을까?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노이 회담은 북미가 '핵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 진행되어 온 소위 '평화 무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일련의 선언적 행위들, 특히 최근 '경제'와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은 2019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올해의 과업으로 ‘경제’와 ‘사회주의’를 부쩍 강조해 오고 있다. 북한이 ‘경제’를 강조해 온 것은 이미 체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진행되어온 당면과제였다. 다만 연일 노동신문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현상이 강화된 것은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했다. 동시에 핵무력 강화를 위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동시에 수행했다. 말 그대로 ‘핵-경제 병진노선’이었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강조해 오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대략적으로 경제건설을 위해 어느 정도 ‘핵무력’강화를 유예할 것이란 추론은 가능했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의 대략적인 틀이 제시됐고 2018년의 4월 전원회의를 통해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각론적 세부 지침을 내려졌을 것이란 정도로 해석된다.

하여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2018년을 기점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평화공존이 모색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단순하게 경제 집중정책이고 북한이 과연 ‘핵포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2017년 ‘핵무력 완성’ 선포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새벽 2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북한의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룬 민족적 대경사”라며, 관련 소식을 전체 6개면 가운데 4개면에 걸쳐 보도했다.¹⁾ <노동신문>에서 이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북한의 보도매체는 연일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당시 노동신문은 △‘3.18 혁명’(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7.4 혁명’(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7.28의 기적적 승리’(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1) 노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9월3일 6차 핵실험) 등 2017년에 진행된 일련의 핵도발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2017년은 로켓 사변의 해라고 부를 만큼 거창한 날과 달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먼저, 중국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인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쑹 특사는 김정은을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²⁾.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주변국들의 어떠한 영향이나 접촉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모든 접촉을 차단한 채 ‘핵개발’에만 올인한 모양새였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는 2018년 신년사 발표를 기점으로 급반전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 참여에 전향적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우리 정부에게 북핵 묵인, 대북제재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면 남북관계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실제로 참여했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화책을 남북관계 발전의사로 받아들이면서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확실히 2018년 평창올림픽은 그동안 소원했던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동시에 북한의 급작스런 전략적 태도변화 등 그 배경에 대한 개운치 않은 뒷말도 남겼다. 하지만 의외로 미 트럼프 행정부 및 주요 미국 언론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호적인 시각에서 다루었고 그에 따라 평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평창’은 소위 해외언론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의 열띤 취재경쟁만큼이나 따끔한 충고를 내놓는 외신도 많았다. 2018년 2월 13일 당시 미 폭스뉴스는 “미국은 당분간 올림픽을 즐겨라. 하지만 올림픽 성화가 꺼지고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면 김정은의 미소 공세도 함께 소등될 것이다”라고 평창의 분위기를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즉 평창올림픽 이후 다시 북미관계는 급냉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폭스뉴스의 칼럼 제목은 ‘트럼프 행정부 북한에 덫을 놓다(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trap is set)’³⁾였다.

반면,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평창올림픽 보도는 북한에 우호적이었다. 다만, 2018년 2월 12일 중도적 시각의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평창올림픽에서 지나치게 호의적인 보도(Critics pan media's positive coverage of North

2) 연합뉴스 2017년 11월 20일

3) FOX news(<https://www.foxnews.com/opinion/trump-administrations-north-korea-trap-is-set>, 검색일: 2018.02.13)

Korea at Olympics)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⁴⁾ 당시 ‘폴리티코’의 비판은 북한이 그동안 해온 행태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마치 ‘쇼’를 관람하듯이 흥미위주의 보도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것이 김여정에 대한 CNN 방송사의 보도였다. ‘동계올림픽을 사로잡았다 (stealing the show at the Winter Olympics)’라는 식의 보도였다. 마찬가지로 북한 응원단의 일사분란 모습에 대한 것도 쾌활하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김정은의 여동생은 매력을 발산하며, 펜스 부통령이 받아야 할 조명을 앗아갔다(Kim Jong-un’s Sister Turns On the Charm, Taking Pence’s Spotlight)”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ABC 뉴스는 “200명 이상 규모 북한 응원단의 ‘일사분란한 응원’이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집중 조명을 받는다(North Korea’s 200-plus cheerleaders command spotlight at 2018 Winter Olympics with synchronized chants)”라고 표현했다.

평창올림픽의 열기는 2월과 3월 남북 특사 교환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먼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을 특사로 파견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 달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파견하여 김정은과 면담을 가졌다. 그 직후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다.

3. 2018년 상황의 전개

1) 북미 싱가포르 회담

판문점 선언은 곧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북핵문제 및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5월 24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파기를 선언하면서 북미간의 냉기류가 흘렀고 이틀 뒤 전격적으로 남북 간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북미 양국 지도자의 모두발언은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 충분할 만큼 호의적인 언사로 시작됐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기분이 정말 좋다. 아주 좋은 대화가

4) <https://www.politico.com/>(검색일: 2018.02.12)

될 것이고, 엄청난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영광이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김정은 역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싱가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그렇게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으로 진행됐다. 북미 양국 정상은 2017년까지만 해도 서로 “늑다리 미치광이” “로켓맨”이라 서로를 비하하면서 날 선 감정을 드러냈었다. 그러다 2018년에 전환된 한반도 분위기에 발맞춰 최초의 북미 지도자간 회담이 성사되었다. 두 정상은 먼저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고 바로 회담장으로 이동, 모두발언을 한 뒤 30여 분간 단독회담에 들어갔다. 이어서 100분간의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마지막으로 두 정상은 4개항으로 이루어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싱가폴 공동선언은 대체적으로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이 북한에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북한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회담의 상징성에 비중을 둔 긍정적 평가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담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로 갈렸다. 분명한 것은 북미 정상간 최초의 회담이었다는 것이고 2018년 상황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는 회담이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실무회담을 통해 더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고 밝혔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 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고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2)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은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 본 바에 따라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서 3차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3차 정상회담은 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우호적인 한반도 정세하에서 진행됐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대부분의 일정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며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 게다가 최초로 남한 대통령이 룡라도 5월

5) 연합뉴스 2018년 7월 17일.

1일경기장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대중 연설까지 했다. 남북은 6개항으로 이루어진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은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모든 분야의 남북관계 복원 및 발전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경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부분은 유엔대북제재하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한미관계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이 제시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복원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일보한 진전이라는 긍정적 평가로 나뉘었다. 국내에서의 논란을 의식한 듯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의 형식으로 평양선언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고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를 천명한 것 처음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차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이었다. 합의서는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골자로 한 6개항을 담고 있다. 이 합의서에는 우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를 위해 양측은 DMZ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있는 남북 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비무장화한다. 아울러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과 역사 유적 공동 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 남북군사합의 사항에 대해 대체적으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합의의 내용이 남북간에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된 부분이 많고 북한편의에 경도되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우선, 해상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한 합의에 따르면 서해는 인천 앞 덕적도에서 북한 대동강 입구 초도까지, 동해는 속초에서 북한 통천까지를 완충수역으로 정하고, 이 수역에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해상관련 합의는 기준선을 북방한계선(NLL)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즉, 남북 직선으로 서해는 덕적도까지 85km이지만 북한 초도까진 50km이고 동해는 MDL 기준으로 속초까진 47km, 북한 통천까지는 33km다. 우리쪽 해역의 양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는 실무자의 실수라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놨다.

특히, 공중 적대행위 중지 합의는 동부지역은 MDL 기준으로 15km, 서부지역은 10km 안쪽 공역에 무인기를 띄우지 않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전방지역은 북한군 장사정포 배치를 비롯한 군사활동을 관찰하는 지역이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중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전방인근 지역 북한군의 도발은 그대로 수도권이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밖에도 비무장지대 GP 철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DMZ 내에 우리군은 GP 60여 개를, 북측은 160여

개를 배치해두고 있는데 동수로 철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가 60여 개를 모두 제거해도 북한은 100개가 여전히 DMZ에 남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3차 평양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와 논란이 공존하는 회담이었다. 남북한이 과거의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의 바람을 불고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동시에 거의 모든 합의가 북한의 '선의'에 기댄 수밖에 없는 취약함도 갖고 있다. 특히, 남북간의 합의 및 군사합의 등이 지난 2018년 1월 1일에 발표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북한의 신년사는 한 마디로 '핵무력 완성'을 수단으로 한 공세적 '평화' 레토릭이었다. 특히, 김정은은 "국가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전쟁억제력'을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여기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 있다는 것과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⁶⁾이라고 언급하면서 핵무력 완성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고위급회담 개최 및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보였다.

2018년 신년사 키워드는 단연 '핵'이 있고 그 다음은 '인민생활'이었다.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풀어드렸으며"라고 언급하면서 핵무력 완성이 선대수령의 유훈임을 밝혔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북한이 핵폐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과 논쟁의 시작점으로 남아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전략무기와 일반 무장장비 개발 생산 고도화와 핵탄두들과 탄두로켓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과 교류활성화도 제시했다. 만약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내용이 현재까지의 한반도 정세 흐름이라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핵탄두 실전배치와 전략무기 고도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4. '경제' '사회주의' 병진노선?

1) 2019년 신년사의 키워드

북한의 2019년 신년사는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자력갱생 경제정책을, 대외적으로는 남북

6) 노동신문 2018년 1월 1일

관계와 미·북 관계개선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가 38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그 다음을 ‘사회주의’로 32회나 차지했다. ‘핵무기’나 ‘비핵화’ 등은 각 1회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신년사에서 언급된 빈도수대로 2019년 이후 북한의 매체 및 공간문헌에서 ‘핵’에 관한 단어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2019년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김일성·김정일 표현이 완전히 생략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정은 방식의 체제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조하면서 군수공업 분야의 인민경제분야 지원과 ‘원자력 발전능력’, ‘군수산업의 민수화’ 관련 언급은 특기할 만 했다. 이는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위해 국방 부문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민수부문 발전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핵무력 강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4대 강군화 노선’을 강조하면서 군수공업의 ‘세계 선진화 수준’으로의 발전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군사 부문에서 일반적인 병력집중형 군사력은 경제건설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첨단군사력 분야는 여전히 핵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극대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2019년을 전후로 북한의 매체 및 공간문헌에서 가장 등장하는 단어는 ‘경제’와 ‘사회주의’다. 노동신문은 연일 경제발전을 독려하는 기사로 전면을 메우고 있다. 일견 북한의 노선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사회주의 병진노선’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정도다.

2)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2019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다. 장소의 선정부터 김정은의 기차정치까지 세계의 시선을 끌고 다녔다. 베트남 하노이 시간으로 2월 27일 18시 29분경 북미정상인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났다. 싱가포르 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20분간 일대일 단독 회담을 한 뒤 1시간 30여 분 정도 친교 만찬을 진행했다. 이후 북미간의 공동선언문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이내 회담결렬을 알리는 보도가 나왔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답지 못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디테일한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하던 차에 나온 반전 뉴스였다.

회담과정과 그 속내는 회담 준비나 진행과정보다는 회담결렬 직후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 보다 더 잘 드러났다.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입장과 관련, 트럼프는 구체적인 코멘트를 피했다. 대신 미국의 비전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1년 전보다는 많이 가까워졌다고 표현했다. 그동안 미국은 비핵화가 denuclearization인지 dismantlement지 그동안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것은 남북미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표현에서도 정확하게 '핵폐기'를 의미하는 'dismantlement'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도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를 핵폐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차이점이 이제야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역으로 거론되던 '영변'에 대해 트럼프는 "그는 우리가 원하는 지역보다 덜 중요한 지역에서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북한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북한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모두가 알고 있던 '영변' 이외의 더 중요한 핵시설을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는 심야에 자청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얼버무리며 "영변지역은 핵시설로 매우 중요한 곳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폐기를 거론했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맥락상 '영변'지역 이외의 더 중요한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미국은 회담에서 그 지역을 직접 거론했던 것이 이번 회담 결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미리 실무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정상들은 상징적인 서명식을 통해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합의 결렬로 끝남으로써 회담의 진행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무런 준비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냥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북미간에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미국은 실무회담을 통한 조율에 무게를 두었다면 북한은 최고 지도자간의 결정에 의존하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다. 따라서 하노이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고 실무진간의 조율은 정상회담직전이나 정상회담 중에도 계속 진행형이었다.

제재해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내용이 약간 엇갈린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모든 제재를 없애기를 희망했다고 말했으나 북한 최선희는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선희의 발언을 놓고 보면 북한이 요구한 제재해제는 유엔에서 2016년부터 취한 대북 제재가 6건 가운데 2270, 2375호 등 다섯 개인데, 여기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270호는 원유, 광물, 무기

거래, 금융거래, 핵무기 자금관련 개인/기관 제재였고 2375호는 원유, 콘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 등 공급량 축소, 섬유수출, 공해상 선박간 이송금지, 공공인프라 제외 합작사업 전면금지,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민생관련 부분이라고 하면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영변 핵폐기 용의를 언급했으나 자신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고 답했다.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으나 우리가 발견한 다른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이다.”이라고 얘기했고 제2의 우리늄 농축시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맞다”고 답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메인 카드로 내밀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보다 포괄적이고 촘촘했다. 이번 회담결렬은 북한이 생각하는 딜의 조건과 미국이 생각하는 북핵 프로세스 간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에 관한 언급이다. 북미대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환경에서도 북한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게다가 북한 반입물자의 93%가 중국을 통해 들어간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더불어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북중 접경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서 북한의 물자반입을 어느 정도 눈감아줬고 북한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미국이 일정부분 용인해 왔다는 것을 확인해준 셈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이 ‘경제강국’이 되길 바란다는 대북 유화용 멘트를 잊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북한의 좋은 개발지역을 김정은에게 설명해 줬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대화의 모멘텀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3) 사회주의강국 건설과 경제강국건설

북한은 ‘경제’와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 충분조건은 바로 ‘경제’ 문제다. 심지어 트럼프까지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을 돕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 그리고 ‘사회주의강국’을 어떤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관련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잠깐 과거로 돌려보자. 북한은 그동안 지도 이데올로기의 절대적 기준에 근거해서 당규약에 체제의 ‘당면목적’과 ‘중국적 목적’을 강조해 왔다. 지도 이데올로기는 현재까지 주체사상-선군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해 왔다. 체제목표 역시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명칭으로 변화되어 왔다. 우선 김일성

시대에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당면목적으로 표방해 왔다. 김일성은 1986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⁷⁾를 발표했고 이 테제는 김일성시대를 관통하는 체제목표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라는 체제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공식적 발표 없이 1990년을 전후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거론하지 않고 일정기간 잠복기를 거쳐 1997년에 '강성대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당규약에 명문화했고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 북한체제의 당면목적으로 언급되었던 '사회주의 완전승리'는 어떤 상태를 뜻할까? 공산주의발전 단계론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회주의 단계로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공산주의 낮은 단계)와 '사회주의 중국적 승리단계'(공산주의 높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아직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즉 수령독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사실상 사회주의 과도기에 대한 해석의 시원은 맑스의 '고타강령 비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맑스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과도기가 존재하며 이 시기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독재가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식 '과도기'론에 따른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징표는 의외로 '경제력 향상' 문제로 귀결된다. 즉,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지고 전 사회가 노동계급화 된 사회로서 사회의 물질토대와 생산력의 수준이 발달한 자본주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중산계층 이상으로 높아진 사회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입증되는 그런 사회를 목표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김일성 시기에 그와 같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김일성의 바람은 김정일체제로 넘어갔다. '강성대국'은 1997년에 처음 언급되기

7)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210-242. 공식적으로 김일성은 1968년 9월 정권창건 20돌 기념경축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주장했다. 『김일성 저작집』 22권 pp. 442-443. 그 후 1970년 5차 당대회 규약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천명하기 시작하여, 1972년 헌법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980년 6차 당대회 규약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992년 헌법에도 나타나지만, 1998년 헌법에서부터 삭제되었다. 시점상 강성대국론의 등장시기에 사라졌다.

시작하였다.⁸⁾ 그리고 1998년 8월 22일 노동신문에 정론 〈강성대국〉이 실리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면서 강성대국의 첫 포성이 울렸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⁹⁾ 당시 노동신문은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며 강성대국론을 역설했다. 북한이 주장해 온 강성대국 건설의 3가지 기둥은 첫째, 정치사상강국 건설이고, 둘째는 군사강국 건설, 셋째는 주민생활을 향상시킨 경제강국 건설이다. 이른바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탄생한 것이다. 달라진 것은 수령절대주의를 기반으로 군사강국을 이룩하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단계론적 설정을 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기존 ‘사회주의 완전승리’가 최종적으로 공산사회를 지향했고 독재체제는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목표달성까지만 유효하다는 유통기한을 설정했었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인 ‘강성대국’론은 그 시효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수령중심체제를 바탕으로 군사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강성대국’론의 요지다.

북한은 ‘강성대국’ 완성원년으로 2012년을 선포했으나 목표달성은 요원했고 김정은체제 공식 출범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1년 즈음부터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용어가 ‘강성대국’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2017년 신년사부터는 ‘사회주의 강국’을 공식화 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김정은은 군사강국건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김정은체제에서 주창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레토릭안에 ‘강성대국론’ DNA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면 ‘핵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굳이 선대수령의 유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과거 김정일은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의 시대에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건설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⁰⁾ 특히, 김일성이 강성대국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았으며 그 뿌리를 마련한 건국의 어버이라고 칭송하면서 강성대국이 과거 김일성시기부터 추진되어 오던 북한체제 발전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표명하였다.¹¹⁾ 이러한 김정일의 언명은 분명

8) 「로동신문」, 1997년 7월 22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엄밀히 말해서 단어로 등장한 것은 그보다 약간 빠른 1997년 6월 7일 〈사회주의조선은 폭풍속에서 성장한 강성대국이다〉이다.

9) 「로동신문」, 1998년 9월 5일.

10)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52.

현 김정은시대에도 통용되는 논리를 갖고 있다. 경제강국 건설은 김정일이 이룩하지 못한 강성대국의 남은 기둥 가운데 하나이고 지금 김정은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맥락은 김정일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5. 결론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결과는 실망과 안도감의 중간쯤이었다. 북미회담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말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 '사회주의'에 올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핵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포기에 이은 경제발전, 혹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적 토대 마련은 다양한 관측속에서 진행중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선대 수령'들이 이룩해 놓은 사회주의적 토대의 강화 내지 사회주의의 종국적 목표를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핵 포기'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또 다른 방정식을 요구한다.

공산주의는 크게 목표이상, 실천계획,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권, 이 세 가지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존재해왔고 존재했던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의 목표이상은 물질적 풍요와 완전 평등이 실현된 사회다. 각 사회주의 국가간에 존재하는 통치시스템의 차이는 그 실천계획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권의 성격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목표이상은 흔히, 현재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유토피아적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가 실천계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정권의 구조를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현재, 북한체제는 내부적으로 사회주의적 계급개념이 일그러진 모습이다. 노동을 중시했고 농업생산을 장려하던 그 정권 초기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노동을 경시하고 농장은 또 다른 이름의 감옥이다. 통치시스템을 왜곡하거나 비틀어서 일정한 부를 축적한 유한계급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체제의 북한은 '경제'와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핵 거래'를 하고 있다. 사상, 군사, 경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목표로 체제의 동력을 몰아가던 김정일 시대를 넘어 핵포기 및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갈림길에서 체제생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주의강국의 마지막 관문인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동원형 경제건설과 과학기술중시정책을

11) 「로동신문」1999년 4월 19일

강조하면서 내부예비를 보완하고, 외적으로는 ‘핵 거래’를 통해 외부예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이 만약 성공한다면 주체적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강국을 이루어 선대 수령들의 꿈을 실현한 지도자로 선전될 것이다.

역대 북한정권의 의도한 체제목표 달성계획은 명확했다. 체제목표는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데 현실이 그 목표수행에 순방향이던 역방향이던 시대적 변화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항상 곡예를 타는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김정은체제의 북한이 ‘강성대국론’의 DNA를 그대로 갖고 또 핵도박을 펼치는 것일지, 북한 지도자의 옥쇄와도 같은 ‘핵’을 포기하더라도 선대 수령들이 도달하지 못한 체제의 초기목표였던 ‘사회주의 완전승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한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김정은은 매우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두 가지 경로 모두 아직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명세, 『북한독재체제는 왜 붕괴하지 않는가?』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김갑식·이기동·오경섭·김동엽. 2015.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 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 김관호,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연구소, 『월간 북한』, 2017년 4월호 (통권 제544호).
- 김동엽. 2013.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열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전략.” 『신아세아』 제24권 3호, 2017.
- 김일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동북아논총』 제65호, 2012.
- 서유석,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위상·권한·엘리트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2013.
- 이기동,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 2010.
- 이상우, 『북한정치 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서울: 오름출판사, 2014).
- 이윤식.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의 MD개발 가속화.” 『북한학보』, 제42집 2호, 2017.
- 정성장, 김정은정권의 대내전략과 대외관계, 세종정책총서 2014-2. 세종연구소.
- 정영환,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합동참모본부, 『습參』, 제60호 (2014년 7월).
-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서울: 통일부, 2017.
-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 발기인대회』, 평화·통일비전 시민회의 발기인대회 자료집. 서울 프레스센터, 2018년 11월 1일.
- 한기범, 권력승계 시기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내외정책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2호 (2010).
-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Politica』, 『조선일보』

한일관계의 갈등과 동아시아 평화

이기완 (창원대)

목 차

- I. 서 론
- II. 역사인식을 둘러싼 인식 차
- III.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
- IV.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
- V. 결 론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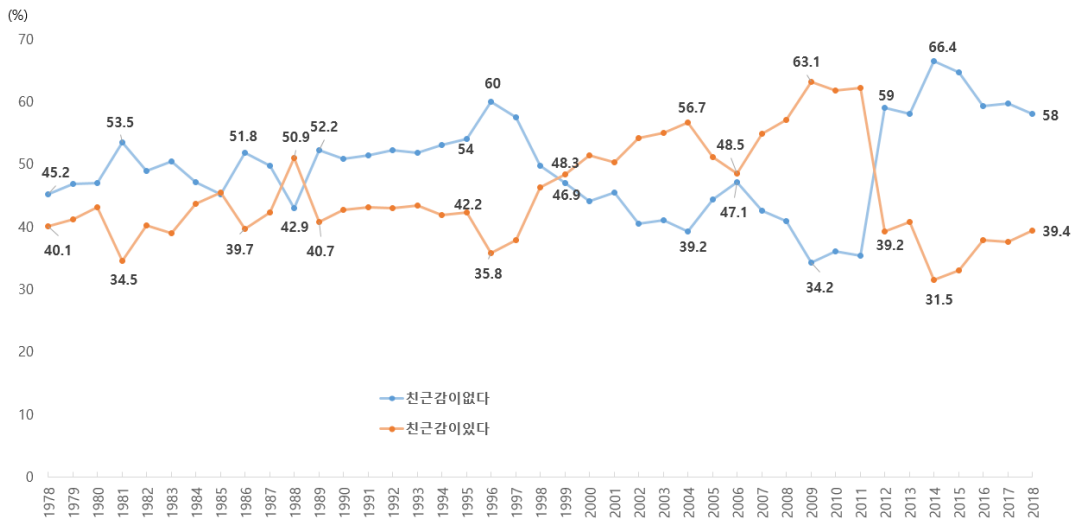
최근 한일관계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2000년대 초 한류열풍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었던 우호협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갈등은 2001년 ‘새 역사 교과서’의 과거사 왜곡,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島根県)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 그리고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공식참배 강행 등으로 인해 초래된 시기보다도 훨씬 고조되고 있으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도 양국 간 미해결의 정치쟁점-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타협의 정치과정을 되풀이해 왔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에 따른 한-미-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극단적 대결구도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아 적당한 선에서 미봉적으로 타협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수주의적 언술과 행동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일관계의 근저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서 자국의 역할을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 측의 동향에 대해 한국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 간 상호 부정적인 인식과 갈등은 한층 확대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확산되는 것에 비례하여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총리부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東京: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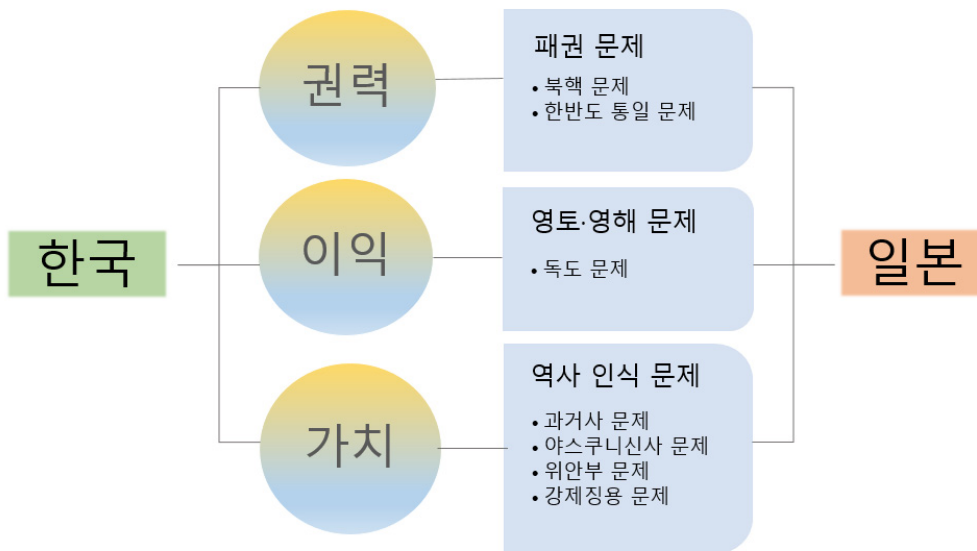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2018년 10월 실시한 일본 총리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중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회답한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21세기 들어 급격히 진행된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 속에서 아베 신조를 비롯한 우익정치인들이 한국과의 미해결 정치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한일관계가 과거보다 한 단계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오히려 후퇴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역사인식을 둘러싼 인식 차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있어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인식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등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의 규범성과 아이덴티티에 관계된 것으로 국가 간에 타협 내지 협상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은 국가 간 외교적 대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국에 대한 반감 내지 적대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¹⁾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발생한 갈등은 개별적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하면서 양국 간 갈등을 한층 고조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림 2〉 한일 간 갈등 이슈의 중층화

우선 한일 간 역사인식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가장 큰 핵심 쟁점은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인식, 특히 1904년 한일의정서로부터 1910년 한일합병에 이르는 과정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식민 지배와 관련한 인식 차이와 처리문제일 것이다.

1) Daqing Yang, op. cit., p. 13.

〈표 1〉 한일 간 역사인식 차이

구 분		합병 과정	식민지 지배
한국		불법 부당론	불법 부당론
일본	보수세력	합법 정당론	합법 정당론
	진보세력	합법 정당론	합법 일부 부당론
	일반시민	합법 정당론	합법정당론

출처: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戦後史からの変容』(東京: 岩波書店, 1995), p. 216 참고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본은 보수·혁신세력을 떠나 “한일합병에 대해 19세기 말 한반도 및 일본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근대화에 공헌했다”는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한일합병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도출된다. 다만, 혁신세력과 일부의 지식인들만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방식이 조선에서 가혹하게 이루어졌던 점을 인정하고 유감과 사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1995년 10월 16일 무라야마 총리도 “한일합병조약은 한일 양국 간에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사죄할 부분은 식민지 지배의 일부에만 국한된다.”고 발언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인식은 ‘일본의 패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45년 8월 15일 쇼와 천황은 옥음방송(玉音放送)에서 ‘항복’ 내지 ‘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종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종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태평양 전쟁이 자국의 군국주의적 정책에 의해 발생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많은 민중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희생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미국의 강대한 힘에 의해 패배했다는 단지 분하고 비통한 인식만이 남아 있게 된다.²⁾

다시 말해 이러한 관점에서는 일본이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침략의 가해자라는 인식이 도출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본은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지정하여 전몰자에 대한 추도 의식을 강화하고 원폭의 피해만을 부각하여 자국도 피해국이라는 점을 강화하는 퇴행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패망과 주변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변국에 대한 멸시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2) 歴史学研究会(編), 『日本同時代史 (1)』(東京: 青木書店, 1990), pp. 50-56.

이러한 일본의 후진적 역사인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1993년 8월 고노 담화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국가는 어떠한 상관도 없으며 전쟁 중 민간업자들이 자행한 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졌던 사건을 과대 포장하여 유포한 날조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일명 ‘고노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일본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익정치인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기 보다는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³⁾ 이러한 동향 속에서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2007년 3월 16일 ‘고노 담화’에서 인정했던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일본 정부가 개입한 정황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여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대표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고 하는 망언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도 고노 담화 재검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일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권고했다. 이 당시 미국의 주요 도시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그런데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미봉적인 위안부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여기서 한일 양국은 일본으로부터 일본군 관여 인정, 일본 정부 책임 통감, 그리고 아베 총리의 서면 사과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와 10억 엔의 보상금 성격, 그리고 합의문의 성격 등을 각기 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함으로써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었다. 우선 소녀상 철거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관련단체가 소녀상 철거에 합의하면 철거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 일본은 치유금으로, 한국은 배상금으로 간주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문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이 합의를 이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던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번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국의 마지막 사과이며 이를 계기로 이 문제는 양국 간에 종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段瑞聡, “教科書問題” 家近亮子(編), 『岐路に立つ日中関係』(京都: 晃洋書房, 2007), p. 74.

어찌되었던 간에 이러한 한일 간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출연금 10억 엔 (약 100억)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위안부 할머니 34명과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 유족(58명) 등에게 약 44억 원을 치유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한 11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치유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여 2018년 1월 기존의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우리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해치유재단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11월 21일에 해산되었다. 이러한 한국 측의 동향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인 동시에 국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이나 파기도 아니며, 10억 엔의 반환 문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한국 측의 입장과 재협상에 응하지도 10억 엔을 회수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있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안부 문제와 함께 최근 양국 간 갈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문제이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당시 신일본제철, 현 新日鐵住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⁴⁾ 그 이유는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신일철주금은 일본정부의 입장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지

4) 1997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씨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패소했다. 2005년 2월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 씨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하지만 원고 4명 중 3명은 현재 사망한 상태다.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 법원이 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에 3%의 지분을 갖고 있어 강제집행을 강행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럴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2018년 11월 29일 신일철주금에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각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한일 간 갈등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약한 가해의식, 그리고 1965년 미봉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등이 중첩되면서 발생하고 있어 2000년대 초반 이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하겠다.

Ⅲ.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

1945년 이래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미봉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일본은 두 가지 점을 들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告示)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 도서로 편입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법적 사실에서 볼 때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해당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독도는 지증왕 13년(512년)에 신라에 귀속된 이래 우리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주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고유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의 하나인 무주지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⁵⁾

다음으로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b항을 토대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은 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 677호 제3항에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명시적으로 나열되었던 독도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⁶⁾ 즉 샌프란시

5) 유철중,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서울: 삼우사, 2006), pp. 135-138.

6)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서울: 해맞이, 2003), pp. 189-191.

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했던 국가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라는 점에 대해 찬동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조약의 상대효력 원칙을 들어 한국정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주된 이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정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배제된 이면에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와 일본의 공작정치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⁷⁾

그런데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은 냉전기 한미일 반공연대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최근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재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는 동시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지는 입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드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일 간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제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것이지만, 독도문제를 일본 민족주의의 부활과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대내적 의도도 숨어 있다. 즉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통해 패전 이후 유지되어 온 군사 소국주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불황에 의해 초래된 국민들의 좌절을 한국과의 갈등을 통해 ‘일본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시켜 국론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

또한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일본 정치지형의 변화와 보수 우경화가 깔려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만 놓고 보면 일본의 급격한 도발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변화와 보수 우경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도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7) 호사카 유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본질적 대응,” 『시대의 논리』 (서울: 교양사회, 2004), p. 15.

8) 이기완,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본질과 전망,” 『경남신문』 2008년 7월 17일.

IV.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

냉전기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한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냉전종식과 더불어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해소와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⁹⁾ 하지만 일본은 국내정치적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관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로 북한 문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2012년 12월 성립한 아베 내각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과 사전 협의 없이 5월 14일 이치마 이사오(飯島勲) 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역)를 북한에 파견하여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를 단행했고¹⁰⁾, 2014년 5월 29일 스톡홀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일본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허용, 양국 간 인적 왕래 허용, 현금 반출 및 대북 송금 상한액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한 기존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떠나 자국의 제1차적 관심 사항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으로부터 제기되는 비난을 피해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하겠다. 당시 미국도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다”고 언급할 정도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도 비난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이 일본의 대북 접근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즉 일본의 대북 접근은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해 초래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였던 것이다.¹¹⁾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9) 김영춘, 『일본의 군사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1-12.

10) 아베 총리의 밀사로 평양을 방문한 이치마 이사오(飯島勲)는 2002년과 2004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때, 총리비서관으로 고이즈미 총리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이치마 내각관방 참여는 평양 체류 기간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송일호 외무성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대사 등과 만나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11) 『통일뉴스』 2014년 6월 2일.

연계하여 해결하겠다는 기존의 포괄전략으로부터 분리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겉으로는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자칫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를 위한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국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체제의 균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한국은 일본의 2015년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과 관련하여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전개 시, ‘한국의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립했다. 1997년 9월 미일방위 협력지침 개정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일본은 그 당시만 해도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에 근거해 미군의 군사작전에 대해 단지 후방지원만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 자유권 행사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존립위기사태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이남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 지역에 들어가 대북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¹²⁾

〈표 2〉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를 둘러싼 한일 간 입장 비교

내용	한국 측 입장	일본 측 입장
집단 자유권에 따른 자위대의 북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우리의 영토 - 우리의 동의와 승인 없이 북한 지역으로의 자위대 전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유효지배 범위 휴전선 이남 - 북한지역으로의 자위대 전개는 한국 정부의 승인 사항 아님

출처: 『동아일보』 2015. 10. 22.

이에 대해 한국은 우리의 영토 관할권은 명백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까지 포함하므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진입 시에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12) 『조선일보』 2015년 10월 21일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 일본에 대해 자위대 파병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¹³⁾ 즉 일본은 미국의 요청과 지원을 등에 업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19세기 말처럼 강대국 간 세력 다툼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간 갈등의 근저에는 국가의 규범성과 가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인식 문제와 국가의 권력에 근간을 이루는 영토문제가 깊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은 과거-현재-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진행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이를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한일 간에는 이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끊이질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일 간 갈등은 일본이 과거사의 문제를 한국인의 시각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해결 가능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과거의 일을 사죄하고 한일 양국이 서로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한일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이를 통한 일본에 대한 불신 해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상호 배려와 이해 등이 새로운 양국관계 형성에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일본 정치인들의 신중한 처신이다. 아무리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영향력 있는 일부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과거사 망언을 되풀이한다면 양국관계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 『YTN』 2015년 4월 28일.

토론

『김정은체제 ‘경제’ ‘사회주의’ 강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논평문 -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배경과 향후 파장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I. 회담 결렬의 배경

1) 비핵화와 상응조치 간 불일치

- 현재 회담 결렬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분분하나,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은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 상응조치’ 간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전향적 비핵화를 요구했으나,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비핵화 없이 북한의 전면적 제재해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힘
 - 폼페이오 장관 역시 “36시간 동안 회담을 했지만,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렬 이유를 ‘합의 실패’라고 설명
-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것(+α)’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결렬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
 - ※ 현지시간 3.1(금)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민생에 지장을 주는 일부 제재해제(11건 중 5건)”라며, 트럼프의 ‘전면 해제’ 주장을 공식 반박

〈표 1〉 ‘하노이 노딜’ 북미간 입장차

	북	한	미	국
비핵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미사일 실험 중단 - 풍계리, 동창리 폐쇄 - 영변 핵시설 중단 및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변 핵시설 + α - 영변 외 새로운 시설 언급 (*30여 지역 중 2곳 언급) - 핵신고 로드맵 제출 요구 	
상응조치 (제재완화)	<p style="text-align: center;">전면적 제재완화</p> 2016~7년에 내려진 안보리 제재 11건 중 5건 해제(민생 품목) 요구		<p style="text-align: center;">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p> 先비핵화 조치 과정에서 신뢰구축으로 제재완화 범위 결정(단계적, 동시적)	

2) 美 국내정치적 변수의 영향

- 美北 회담의 시점에 美 국내적 관심은 물러 특검의 결과 발표와 트럼프의 前집사 변호사 코언의 하원 청문회에 집중되어 있었음
- 그러나 트럼프에게 再選은 단순히 대통령을 한번 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퇴임 후 餘生을 감옥에서 보내느냐 마느냐의 차원
 - ※ 美 현행법은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공소 시효가 5년인 선거법은 무효가 될 수도 있음
- 이에 북한과의 미흡한 협상으로 민주당은 물론 당내 政敵, 그리고 美 주류 언론들의 비판에 직면하기 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깨버리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 실제 협상이 결렬되자 同 뉴스가 ‘코언 증언’을 일시적으로 압도했고,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잘 결렬시켰다’는 평가가 다수

3) 김정은의 과도한 자신감과 상황 오판

- 싱가포르에서 별다른 양보 없이 큰 성과를 얻어낸 김정은은 하노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빠짐
 - ※ 평양역에서 시작된 환송행사가 중국을 縱斷하는 60여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또한 이례적으로 이를 北 매체에 실시간 보도한 것 역시 자신감의 표출
- 특히, 김정은은 국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 트럼프가 회담 성사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합의해 줄 것이라 오판했고, ‘백업 플랜’에 대한 준비없이 회담에 임했다는 것이 결정적 실수

4) 탑다운(top-down) 방식의 문제점 노출

- 북미간 협상 당사자로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실무협상 없이 현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top-down 방식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
 - 즉, 이번 협상 결렬은 정상회담 개최 前 실무협상에서 의제 조율이 얼마나 잘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임

- Top-down 방식이 단순하고 직접 관장 가능한 업무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의사 왜곡이 없는 결정이 가능하지만,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多重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비핵화 협상’에서는 그 효과가 의문
- 또한, 시간 부족으로 ‘비핵화와 제재완화 수준’에 대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문제

II. 향후 파장 및 전망

1) 정부의 ‘新한반도체제’의 차질 불가피

- 美北 협상 결렬로 문제인 정부의 南北 경제협력체제 구축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주도적 입장 추진 계획에 차질이 발생
- 정부는 회담이 성공했다면, 3·1절 경축사에서 新한반도체제를 발표하고 그 즉시 대대적인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
 - ※ 2.21(木) 文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경협 비용(최소 100조)을 떠맡을 것”이라며 회담 성공을 위해 ‘경협 카드’를 활용하라고 권고
- 그런데 문제는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文대통령은 여전히 新한반도체제의 지속적 추진을 밝히고 있어, 향후 비용 관련 남남갈등은 물론 경협의 범위 및 수준 관련 韓美간 마찰도 불거질 전망
 - ※ 韓美 워킹그룹에서 남북경협 재개(철도연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관련 논의를 한다면, 합의되어 통과될 내용이 거의 없을 것임

2) 대북제재 압박(maximum sanction) 가능성 증대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美 의회, 즉 민주당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옴
 - ※ 밥 메넨데즈(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싱가폴과 하노이 회담으로 대북제재 이완이 발생한 바, ‘강력한 대북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함

- 한편, 일각에선 실무급 협상을 통해 對北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역시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는 차원의 주장에 불과
 - ※ 브래드 셔먼(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미북회담을 다시 개최하는 건 ‘시간낭비’이므로, 제재 강화를 통해 더 좋은 협상 타결을 유도”해야 함
- 이렇게 볼 때, 당분간 美 의회 및 조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화·협상’보다 ‘제재·압박이 우선’이란 주장에 훨씬 더 힘이 실릴 전망

3) 북한發 변수의 돌출 가능성 주목

- 이번 사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강력한 자신감을 보이던 김정은이 한방 얻어맞은 셈이어서,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수습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
- 우선, 對美 협상을 주도한 김영철과 김혁철의 ‘철-철 라인’에 대한 교체가 예견되며, 속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 회담 결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리용호와 최선희가 主導한 것으로 볼 때, ‘최고 존엄의 권위에 흠집’을 낸 김혁철은 이미 교체된 것으로 평가
- 다음, 미국과 협상 결렬로 제재완화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한국 쪼오기’가 노골화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경협(철도연결,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범위와 수준을 놓고 한미간 마찰이 재현될 수도 있음
 - ※ 북한 경제는 2017년 대비 수입 -40%, 수출 -90%로 급減, 경제성장률 -5%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경제적 한계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 ※ 2017년 경제성장률 -3.7%, 2018년 -5%, 올해 1/4분기 역시 -5% 내외 전망
- 한편, 그럼에도 김정은은 갑자기 노선을 강경으로 선회해 핵미사일 시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음
 - 즉,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갑자기 공세 모드로 돌변하기 애매한 상황

Ⅲ. 향후 대응책

1) 회담 결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 우선, 회담 결렬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고, 한미간에 공조는 체계적으로 잘 유지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함
- 특히, 회담 결렬 과정에서 한미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바, 이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 규명이 필요
 - ※ 외신이 2시 53분 첫 결렬을 보도하고, 백악관이 3시 38분 공식화하던 시점에도 청와대는 정례 브리핑(2시 27분)에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음
- 무엇보다 북한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 진 바, 당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힌 당국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
 -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 아니면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 재개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

2) 향후 정부의 남북경협 과속에 대한 여러 차원의 견제가 필요

-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간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文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등 경협 재개를 위해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밝힘
 - ※ 3·1절 경축사: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북한지역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의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는 현실적으로 안보리 결의안 2375호(18조, 남북합작 사업 금지) 위반이므로, 향후 정부는 결의안을 손되지 않고 대북제재완승인만으로 가능한 ‘철도 연결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 철도연결 비용은 최소 70조 8,000억(씨티그룹, 2018)에서 최대 153조(금융위, 2014)가 필요, 개보수 비용만도 8조 6700억(통일부, 2008)이 투입

- 따라서 남북경협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부의 비핵화 없는 경협 과속을 견제

3) 美 조야 및 민주당과의 네트워크 강화

- 현재 미국에는 트럼프가 지휘하는 美 행정부와 트럼프의 대외 기조에 반대하는 의회, 전문가 그리고 여론 등의 美 조야, 즉 ‘두 개의 미국’이 존재
- ‘두 번째 미국’은 트럼프가 상업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훼손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북한이 핵을 지렛대 삼아 동맹 이간을 시도하는 것을 지속적 견제
 - ※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한 ‘국방수권법’,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을 촉구한 ‘아시아 안심법’ 등을 통해 트럼프의 독단을 견제
- 이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보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고, 북한과의 잘못된 협상에 우려를 표하는 두 번째 미국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

4) 북한 비핵화 관련 입장을 정립해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

- 무엇보다 비핵화의 개념, 방법, 단계, 그리고 해법 등에 이르기까지 비핵화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시켜야 함
 - ※ 비핵화 개념: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의 구분
 - ※ 비핵화 방법: CVID → SVID → PVID, FFVD, CVC 등
 - ※ 비핵화 단계: 핵동결 → 신고 → 사찰·검증 → 불능화 → 핵 폐기
 - ※ 비핵화 해법: 외교적 협상, 경제적 제재, 군사적 옵션 등
- 그 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및 체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남북 교류협력 방안, 그리고 북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재난, 민족동질성 회복 등에 대한 개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토론

『한일관계의 갈등과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논평문

황수환 (강원대)

본 논문은 복잡한 한일관계에 대해 역사인식, 영토갈등, 북한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분석한 글이다. 본 논문을 토대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지면서 한일관계는 북미관계의 난항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비폭력 평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한일관계 회복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3·1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는 발언에서와 같이 화해, 용서를 통한 치유의 과정 역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적대적 감정을 지닌 국가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 즉 용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윤리적 복잡성이 나타난다. 만약 쌍방이 용서에 관해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되면 가해자에게 어떠한 배상 혹은 처벌을 부과해야 하는지로 관심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 사죄에 미온적이고, 미온적인 일본의 태도로 인해 우리는 분노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진정한 용서는 단지 고립되거나 윤리적으로 고매한 행동이 아니라 증오가 낳은 분열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용서하는 자는 어떤 적극적인 상호 긍정의 수준에서

적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공존(co-existence)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 정치적으로 공존하기 위해 일본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용서의 목적이 새로운 정치적 유대의 형성에 있다면 관용이 잘못의 시인을 촉발시킬 수 있다. 용서하는 자의 용서는 적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능하며, 용서받는 자도 상대가 진정으로 관용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를 의도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확약이 필요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최근의 행태와 군국주의 부활 등의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일본을 타도하는 것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인 인식하면서도 그들이 과연 용서받을 준비, 즉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등재후보학술지 『평화와 종교』 제7호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평화종교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등재후보학술지 『평화와 종교』 제7호 기고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투고마감일 : 2019년 4월 30일(火)까지 원고를 받습니다. (6월 30일 발행예정)
2. 주제 : 『평화와 종교』는 평화사상과 그 일반, 종교사상과 그 일반 등에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aprs.org/Login>)에 투고해 주시고 투고가 어려운 경우 학회메일(kaprs@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분량 : 분량은 A4용지 20매 또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심사 및 게재원칙
 - 1) 투고하시는 분은 투고와 동시에 연회비를 학회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공동저자일 경우 게재가로 확정되면 모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3) 심사는 해당전공분야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4) 동일기관 소속논문은 해당 호에 2편까지 게재 가능합니다.
 - 5) 투고 후 별도의 심사료는 없으며 심사 후 게재확정시에는 소정의 게재료가 지급됩니다.
6. 기타 : 투고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prs.org)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회 사무국(041-530-88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평화종교학회 편집위원회

